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1995

1994. 12. 25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世界情勢는 냉전종식 이후 和解와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韓半島 주변환경 또한 脫冷戰期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북한 관계는 냉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남북대화가 여전히 斷絶된 상태에 있다.

1994년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비감축, 동유럽 舊社會主義 국가들의 경제회복, 중동지역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과 미국간 핵협상 타결 등으로 세계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격화된 民族紛爭은 새로운 국제안보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탈냉전기의 流動的인 狀況을 보여주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相互 依存關係를 심화시키면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은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4년 상반기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IAEA간의 갈등은 유엔의 對北制裁 결의안 채택 움직임으로 증폭되었다.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카터 前 美大統領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한은 평양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북한과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북·미회담은 연기되었다.

북한은 10월 21일 미국과 核協商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적 제재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정세는 아직 김일성 사망에 따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 異變이 발생하지 않는 한 1995년 상반기에 김정일 체제가 공식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金正日은 침체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외개방정책 등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체제보존을 위해 開放의 범위를 制限할 것이며,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內部結束을 강조하며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구도가 확정됨에 따라 1995년 한반도 주변정세는 和解의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 內部에서는 북한이 權力承繼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노정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확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단 50년을 맞게되는 1995년에는 남북한이 相互 理解의 폭을 넓혀 실질적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면서 民族統一研究院은 1994년의 통일환경, 북한정세, 남북한 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토대위에서 1995년의 정세변화에 대한 展望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의 分析과 展望이 통일문제 관련기관 각계인사들의 남북관계 전개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4년 12월 25일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目 次

要 約	1
I. 統一環境	19
1. 世界情勢	19
가. 政治와 軍事·安保	19
나. 經濟	27
2. 東北亞情勢	31
가. 東北亞 4強의 相互關係	31
나. 東北亞 安保環境	47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54
가. 韓·美關係	54
나. 韓·日關係	56
다. 韓·中關係	58
라. 韓·러關係	60
II. 北韓情勢	64
1. 對內情勢	64
가. 理念과 權力承繼	64
나. 經濟事情과 經濟開放	68
다. 逸脫行爲 및 社會統制	73
라. 軍事動向	77

2. 主要 對外動向	79
가. 北·中關係	79
나. 北·러關係	83
다. 北·日關係	86
라. 北·美關係	89
3. 對南戰略	92
III. 南北韓關係	96
1. 核問題	96
2. 當局間 對話	102
3. 交流·協力分野	109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109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113
4. 人道主義的 事案	116
5.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20
부록 : 1994年度 主要事件日誌	125

要 約

빈 면

要 約

1. 統一環境

가. 世界情勢

1994년도 정치와 군사·안보정세는 미·러간 核 및 在來式 軍事力 감축노력 지속, 미국의 중동 평화협상 중재 성공 및 북한 핵협상 타결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개선된 반면, 보스니아 및 르완다 사태 등 地域的 民族紛爭의 격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냉전이후 시대 唯一 超強大國으로 부상한 미국은 중동 평화협상 중재와 북·미 제네바 협상 타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질서의 安定者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내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분쟁 介入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同伴者關係를 확대하고 있으나 강대국 지위의 회복을 위하여 獨自外交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러간에는 동구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편입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露呈되기도 하였다.

세계경제는 1993년말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비한 貿易自由化 및 유럽경제지대(EEA)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출범에 따른 地域主義化 추세를 동시에 나타냈다.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도 회원국간 무역을 선진국은 2010년, 개

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여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동구국가들의 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 및 중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兩分化된 상태로부터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으로 구분되는 三分化된 상태로 나아가 갈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은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II) 비준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연장 등을 통해 다자간 군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미국은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지역강대국이나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와 함께 安保役割을 分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제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多者間 安保協力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북대서양협력위원회(NACC)나 APEC 등에서 자국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바, 관련 당사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확보를 牽制하려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무역이 촉진될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과 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 정착이 실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東北亞情勢

1994년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4강은 선진우호관계와 경제협력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국익확대를 위한 경쟁을 심화하였다. 한

반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나,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다수의 양자간 정상회담과 외무·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新國際秩序 再編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확대하였다.

1994년 안보면에서의 특징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협조체제 유지와 양자간 군사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共助體制를 유지하였다. 한편 중·러는 대북한 제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4자회담이나 8자회담 등을 제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군사면에서는 중·러가 국경지역에 대한 군축에 합의하였고, 미·러와 일·러는 합동 해상수색 구조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은 일본 및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신뢰회복과 군사·안보면에서의 협력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중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핵실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은 1994년 동북아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의 중국 人權問題와 最惠國 待遇 連繫, 미국의 대만 및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증액 요구 등의 문제들은 양자관계의 갈등과 대립요인이었다.

경제면에서는 역내 국가간 교역이 증대되는 가운데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험확대를 위한 기반이 확충되었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미·일의 투자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APEC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先導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우선정책에 따른 한·중·일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일·중에 대한 무역역조 시정요구,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 약속이행 지연, 일·중간 엔차관 기간 연장 문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1994년 경제면에서 양자간 갈등이 露呈되었다.

1995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강대국간의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국가들은 등소평 사후 야기될 수 있는 중국의 혼란과 한반도 불안정 가능성 등에 공동 대처하고 경험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戰略的·經濟的 同伴者關係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역내 국가들의 축적된 경제력과 역내 안보 불안요인이 단기간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군비경쟁 및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 등 지역 불안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신뢰구축을 制度化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表明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地政學的 특성상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이 조기에 具體化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輕水爐 採擇 등 이행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간의 상당한 의견차이를 노정할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형 경수로의 채택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미간 합의는 중·일·러 등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95년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북·일 수교교섭이 진전되면 중·러는 북한에 대한 既得權 維持를 위하여 대북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카드를 대한민국 외교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면에서는 역내 국가들의 경쟁이 증대되고 중·러 및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나, 역내 국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 미·일과 미·중 및 한·미간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北韓情勢

가. 對內情勢

1994년 북한의 최대 사건은 김일성 사망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급서에 따른 정치사회적 과장을 極小化하면서 김정일 후계체계를 공고화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 및 정책 지도노선을 계승하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정일체제의 鞏固化는 또한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내정세에는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

다.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94년 들어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한 북한경제도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社會的 逸脫현상도 꾸준히 증가하여 탈북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1995년 북한은 김일성의 지도노선을 원칙적으로 承繼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정일체제의 등장에 따른 북한의 역사적 전환기와 핵문제 해결이라는 국면적 정황, 그리고 대외개방의 필요성 증대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년 북한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으면서 김정일의 최고지위 承繼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기반 鞏固化를 위해 偶像化 작업과 유일지도체계 강조, 간부의 충성심 제고 및 주민들의 결속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건강문제 등 突發變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김정일의 權力承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외개방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개방은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공고화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의 국제적 이행과정에 따라 구체적 실천내용이 可變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비록 북한이 개방에 박차를 가하더라도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당장 可視化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1995년에도 북한경제가 급격히 호전될 전망은 희박하다.

셋째, 북한은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고 대외개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내적 사회통제 및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침체에 의한 사회적 불만이 개방에 따른 해외정보와 외부사조의 流入과 連繫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직적 차원의 社會的 逸脫行爲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에 따라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일탈행위는 북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을 이행하는 한편 1995년도에도 각종 재래식 군사력 증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중 및 대러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對外關係

1994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관계는 핵문제로 인하여 국제적 갈등과 마찰이 表面化되었으나 김일성 사망과 제네바 북·미간 핵문제 타결 이후 대체로 호전되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긴밀한 유대를 유지했으나, 경제교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북·러관계는 핵문제와 시베리아 벌목공문제로 인하여 다소 긴장되었으나 하반기 김일성 사망과 핵문제 타결 이후 개선되었다.

북한의 일본과의 관계는 정치·외교적 냉각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양국간 경제교류도 크게 萎縮되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핵문제 때문에 대결적 국면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양

국은 접촉을 부단히 계속하였으며, 제네바 북·미회담 이후 양국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1994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김정일 후계체계에 대한 우호적 대외환경의 구축 및 핵개발 카드의 效用極大化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1995년 북한의 주요 대외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북·중관계는 중국이 김정일체제의 안정에 협력하고 북한의 대외개방을 지원하는 가운데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기존의 정치적 유대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북한이 대서방 경험정책을 적극화할 경우 중국의 仲介役割이 전망된다.

북·러관계는 전반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최근 동북아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강화하면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 경수로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강력히 表明할 것이다.

북·일관계는 핵문제가 북·미간 기본합의 이행에 따라 양국간의 수교교섭이 재개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북한이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 여부, 과거사 문제, 재일 조총련 대우 문제 및 이은혜 문제 등으로 인해 북·일 수교가 1995년에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미관계는 양국간의 最大 懸案이었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1995년에는 양국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부문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교관계가 급진전하여 상반기중 연락대표부가 쌍방의 수도에 설치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

체제재 조치도 더욱 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의 공화당 압승과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은 양국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蓋然性이 있다. 북한 영공침범 미군 헬기의 조종사 송환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대미 현안을 고위정치회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對南戰略

1994년 북한은 남한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여 「主 對美協商, 從 南北對話」 전술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문민정부를 비하한대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일시 자제하였던 대남비방을 김일성 조문과동을 계기로 한층 강화하면서 이를 통일전선전술에 활용하였다.

1995년 북한의 대남전략은 근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 김정일체제하에서도 북한은 「통일3원칙」 및 「10대강령」의 구현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천 등 김일성의 대남정책을 계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실천과 같은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분단 5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등을 거론하며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실리 확보를 위해 제한된 개방지구에 대한 한국 민간기업

의 투자유치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南北韓關係

가. 核問題

1994년 초 북한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IAEA의 사찰을 수용하였으나,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하고 IAEA의 임의 선택과 분석 요구를 거부했다. 核問題를 둘러싸고 북한과 IAEA간 갈등이 재연되자 韓·美 양국 등 북한 핵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制裁를 추진하였다. 유엔의 對北制裁 결의안 채택 조짐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카터 前 美大統領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과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基本合意文을 채택하였다. 북·미 기본합의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와 총 2,000MW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는 반면, 북한은 NPT에 완전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며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북한에 반입되기 전에 과거 핵의혹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이다.

기본합의문 이행은 현재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韓·美·日을 중심으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후 북한과 KEDO간의 경수로건설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北·美 기본합의문 移行體制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관련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共和黨이 미국 의회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北·美 합의문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당초 합의와 달리 KEDO내에서 한국이 과도한 財政分擔을 떠맡도록 미국으로 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나. 當局間 對話

1994년 상반기 남북한 당국은 1993년에 이어 특사교환을 위한 5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은 특사교환의 성사에는 관심이 없고, 남북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삼는 北·美會談 재개에 필요한 형식요건만을 갖추려고 하였다. 특사교환을 위한 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한은 카터 전 미대통령의 訪北을 계기로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졌다. 부총리급을 首席代表로 하는 예비접촉에서 양측은 7월 2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급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한편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어 남북한간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核·經協 連繫方針을 완화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보안법 철폐 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경협활성화 조치를 비난하였다.

정부의 經協措置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고려할 때, 1995년에도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 基本合意文 채택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핵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서방과의 경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南北對話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1995년 하반기 북한측 대화 당사자가 될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안정될 경우, 頂上會談 개최를 위한 실무자급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高位級會談과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부속기구를 통한 남북대화 개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한 이후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기존 대화채널의 正當性을 부인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다. 交流·協力分野

1994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남북한 교역규모는 1994년 11월말 현재 前年度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북교역의 침체상태에도 불구하고 委託加工 交易은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의 人的 交流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1994년 11월말 현재 30건, 384명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核問題 대두 이전인 1991~92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모두 제3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 學術分野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이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확대되고 있는 委託加工交易의 증가추세는 1995년에 계속 유지되겠지만, 경제교류·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일체제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外部世界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인 바,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인적 교류가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은 적다.

라. 人道主義的 事案

1994년 이산가족들의 對北 住民接觸 사례는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 이산가족상봉 주선단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산가족 연락센터가 설립되어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알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交流經費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1995년에는 제3국을 통한 상봉 및 서신교환이 늘어날 전망이다.

1994년 현재 시베리아 지역 벌목장에 북한 노동자 1만 여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 중 170여명이 非人間的 대우 때문에 탈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한귀순 希望者 全員收容 방침을 천명하고, 러시아 등과의 교섭을 통해 탈출 벌목공 16명을 입국시켰다. 북한 당국은 남한 歸順者들의 가족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벌목공의 탈출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國際赦免委員會는 평양 근교 승호마을에 6백여명의 良心囚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면위가 공개한 정치범 55명의 명단에는 재일교포 24명과 남북인사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나, 1995년에는 북한 人權問題가 남한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마.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1994년 남북한 인사들이 國際舞臺에서 접촉한 사례들이 있으나 이들 접촉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오히려 갈등적인 요소가 두드러졌다.

1995년에는 특히 북한 경수로건설 지원 등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협력이 부분적이거나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經協 收容拒否 등 경직된 대남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때 국제무대에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빈 면

빈 면

I. 統一環境

1. 世界情勢

가. 政治와 軍事·安保

(1) 美·러의 軍縮持續과 東아시아의 軍備增強

1994년 미·러간에는 核武器 및 在來式 軍事力에 대한 감축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각국들의 軍備增強이 강화되고 있다.

미·러간에는 핵감축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정상회담(1.12)에서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핵탄두에서 제거된 500톤의 고농축 우라늄 구입에 합의하였다. 동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46기의 SS-24 ICBM으로부터 제거한 200개의 핵탄두를 1994년 11월까지 러시아에게 移讓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100톤의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댓가로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6,000만 달러의 기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1995년 9월까지 核實驗中止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양국의 핵미사일이 각기 상대방을 목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목표물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장치를 제거하거나 公海로 향하도록 합의하였다.

클린턴 미대통령과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9.28)

을 통해 제1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이 發效¹⁾되고 제2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I)이 비준되면 그 직후부터 전략핵탄두의 解體를 시작하여 전략핵감축을 목표시기인 2003년보다 더 일찍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정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延長과 핵물질의 밀수방지를 위한 협력, 핵탄두 저장에 관한 정보교환, 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대폭적인 군사력 감축계획인 「累積方式에 의한 검토 보고서」(Report on the Bottom-up Review)에 따라 일방적으로 戰略武器 및 在來式 軍事力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미국은 6기의 트라이던트(Trident) C-4 미사일로 무장한 핵잠수함을 退役시켰고, 미뉴트맨 (Minuteman) II 대륙간탄도탄을 신속히 제거하고 있다. 135개의 대륙간탄도탄이 지하격납고로부터 제거되었고, 나머지 126기의 대륙간탄도탄도 목표물 기록장치가 제거되어 작전임무로부터 해제되었다.

전략폭격기 분야에서도 모든 B-52 G 폭격기가 退役하였고, 127기의 B-52 C/D/E/F 폭격기가 除去되었다.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미국은 육군 26,300명과 해병대 9,000명을 감축하였으며,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에 따라 유럽주둔 탱크 200여대가 제3국 수출 및 이전 등을 통해 감축되었다. 미 공군은 4개 전투비행중대를 退役시켰고, 200기 이상의 공군기

1) START I 은 1994년 12월 5일 발효되었다.

(F-4, F-11, F-15, F-16 A/B)를 감축하였다. 미 해군은 18척의 크르주 미사일탑재 함정과 28,000명의 병력을 감축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도 核 및 在來式 군사력을 減縮하고 있다. 러시아는 CFE에 따라 700대의 탱크와 1,000문의 대포를 감축하였고, CFE의 제한범위 밖에 있는 우랄산맥 동부지역에서도 대량의 무기감축을 단행하였다. 클라프츠크 우크라이나대통령은 클린턴 미대통령 및 엘친 러시아대통령과 가진 모스크바 3자회담(1.14)에서 우크라이나에 配置된 구소련 핵무기의 전면적인 廢棄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미·러에 의한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합의사항에 따라 SS-24와 SS-19에 장착된 300개의 핵탄두를 解體 목적으로 러시아에 양도하였다. 또한 벨로루시는 27기의 이동식 SS-25 ICBM, 카자흐스탄은 40기의 TU-95 전폭기를 러시아로 移轉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12.5)에서 NPT에 가입함으로써 4개 구소련 핵보유국과 미국은 START I을 發效(12.5)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독립국가연합의 軍事力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다. 이는 동지역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함께 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장비를 現代化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러 등이 냉전종결로 인해 감축하게 된 무기를 동아시아 지역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육군 군사력을 감축하는 대신 해군력과 공군력을 확충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예기 MiG-29의 도입, MiG-31의 라이선스 생산 등 무기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사일 구축함이나 잠수함 등의 신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도 미국의 F-16 전투기와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의 구입과 함께 새로운 對空 및 對艦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신형 해군 함정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대만은 이와 같은 최신형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총 3,000억 원의 특별예산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일본도 政治·安保的 役割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1,000해리 海上輸送路 방위 등 지역적 군사역할 수행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제2차 방위력정비계획(1991~1995)」(총 22조 1천 7백억엔)을 수립하고, 국방비의 약 25%를 전략증강을 위한 무기 구입에 割當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차세대 주력함으로 항공모함을 護衛할 수 있는 AEGIS함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전력면에서 공중조기경보기(AWACS) 도입과 전술항공기의 作戰半徑을 연장할 수 있는 공중 급유기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국가들도 미국 및 러시아로부터 현대화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1996년 輕航空母艦을 就役시킬 예정으로 있는 바, 域內 국가들 중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잠수함 부대 창설,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등을 통하여 해상정찰 능력을 확

장하고 遠洋展開 能力을 保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독자적인 軍需産業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세로 볼 때, 1995년에도 미·러간 군축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TART I이 發效함에 따라 조약국들은 30%의 전략무기를 감축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보다 큰 폭의 감축을 약속한 START II에 대한 비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차원의 군비증강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분쟁을 관리할 지역차원의 多者間 安保協力の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 地域紛爭의 平和的 解決 摸索

탈냉전시대 세계안보질서의 특징은 국가간 협력이 증대하고, 지역통합의 趨勢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려는 힘과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려는 힘이 동시에 作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도처에서 民族紛爭과 地域紛爭이 표출되고 있는 바, 미·러 등 강대국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보스니아와 르완다 등에서는 민족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폭적인 군비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지역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간의 상호인정(1993.9.13) 및 국경협정 조인(2.12)을 仲裁하였으며, 양측간 PLO 자치협정의 締結(5.4)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과 요

르단간의 평화조약(10.26)도 仲裁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促求함으로써 중동지역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구소련의 代理戰 양상을 보였던 앙골라에서도 앙골라정부와 反軍인 앙골라 전면독립민족동맹(UNITA)간의 평화협정이 締結(11.20)됨으로써 19년간에 걸친 內戰이 終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스니아에서는 이슬람 정부군의 공세에 밀린 세르비아계가 유엔안보리가 선포한 안전지대인 비하치 지역을 전면공격함으로써 擴戰일로를 걷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크로아티아 지역에 있는 세르비아 비행장을 공격(11.21)함으로써 보스니아 사태는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스니아사태는 세르비아계의 공세가 강화되어 세르비아계의 勝勢가 굳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현상에 대한 推認 형식으로 보스니아의 실질적인 분할 및 세르비아 세력과 신유고연방간의 大세르비아 건설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1994년 4월 6일 이후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내전으로 3주만에 50만 명에 달하는 대량학살 및 餓死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地域紛爭의 격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는 달리 미·러가 적극적인 安保役割을 담당하려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서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러의 安保 역할을 미처 代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이외 지역에서는 미국 및 프랑스가 地域紛爭 해결을 위해

직접 군사력을 파견하거나 유엔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을 展開하였으나, 이들 강대국들이 국내 정치·경제적 이유와 유엔의 재정난으로 지역분쟁을 철저히 관리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에도 보스니아 사태를 비롯한 地域紛爭들이 지속될 것이나, 이러한 지역분쟁이 주변국으로 擴散되지는 않고 진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쟁 지속으로 인해 지역분쟁 당사자들의 힘이 消盡될 것으로 보이고, 미·러 및 주변국들이 평화와 안정을 希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3) 地域安保의 役割分擔과 多者間 安保協力

냉전이후 시대에 국가간 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바, 각국들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수립과 「지역안보포럼」 등을 통해 지역안보를 유지하려는 趨勢가 나타나고 있다.

보스니아사태 등 민족분쟁이 격화되고 러시아 총선(1993.12.12) 이후 러시아 民族主義가 부활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은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NATO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NATO 가입 대신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NATO 브뤼셀 정상회담(1.7)에서 동유럽 국가들에게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 PFP) 수립을 제의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NATO는 폴란드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동유럽 국가 및 스웨덴,

핀란드 등 17개국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조약을 개별적으로締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NATO와의 협의채널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여 합동군사훈련 및 무기 도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지만, 러시아 民族主義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유럽에 대한 안보공약과 같은 直接介入을 통한 안전보장을 동유럽에 제공할 수 없고 단지 多者間 安保形式의 협의체적인 안전보장만을 確約하게 되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유럽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NATO의 중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동유럽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유럽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하에 NATO내 유럽 국가들의 역할증대와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참여 확대를 促求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여타의 다자안보협의체 보다 조직과 평화유지 기능이 강화된 북대서양 협력회의(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 : NACC) 및 다국적군 창설을 동유럽 국가들의 참여하에 추진함으로써 유럽에 대하여 安保役割을 分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CSCE 회원국들은 부다페스트 정상회담(12. 5~6) 후에 채택한 「부다페스트 문서」에서 이 기구의 기능을 단순한 정치협의체로부터 실질적인 常設 安保機構로 강화하기로 하고 명칭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의 군사력 현황 공개 및 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군비통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등 地域紛爭 해결을 위하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3,000명에 이르는 평화유지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중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NATO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간에 심각한 대립을 보임으로써 CSCE의 장래에 비관적인 전망을 안겨 주었다.

아·태지역에서도 동남아 국가연합(ASEAN) 6개국과 미·일·중·러,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18개 국가 및 기구의 외무장관들이 동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는 최초의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이 개최(7.25)되었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역정세와 군사력의 透明性 增大 등 信賴構築 措置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ARF를 연례회의로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 한·미, 미·일, 미·필리핀 등 양자간 동맹조약 중심의 지역 안전보장문제가 냉전이후 시대 豫防外交의 일환으로서 다자간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논의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세계안보질서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1995년에도 지역강대국들과 안보역할 분담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적 다자안보기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나. 經濟

(1) 世界經濟의 自由化 進展

1994년의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 아시아국가들

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 정착으로 인하여 평균 2.5%의 성장을 보였다.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4.12~15)된 각료회의를 끝으로 지난 1986년 이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에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가입국 12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25개국이 참여하여 현 GATT 대신 향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新設(1995.1.1)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의회는 미국의 주권을 내세워 클린턴 대통령과 보완책에 합의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안을 비준(12.1)하였다. 미 의회가 행정부와 합의한 내용은 ① 5명의 연방 항소법원판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WTO가 미국에 부당한 결정을 5년내 3차례 내렸다고 판정할 경우 미 의회는 WTO 탈퇴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WTO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는 행정부에 무역분쟁과 관련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WTO가입에 대한 留保條件을 명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WTO내에서의 특별한 지위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WTO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5년 세계경제는 3.5%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말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세계각국이 1994년에는 동 협상을 비준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부터 WTO가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WTO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하여 무역자유

화를 촉진할 것이며, 과거의 GATT 체제와 달리 국가간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다. WTO는 GATT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였던 농산물과 새로운 영역인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자유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開放的 地域主義 發展

1994년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지대(EFTA)간 결합에 의하여 유럽경제지대(EEA)가 탄생(1.1)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출범(1.1)하는 등 세계경제에서의 地域主義化 趨勢가 지속되었다.

한편 아·태지역에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함으로써 開放的 地域主義가 발전되었다. APEC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11.11~12)와 1993년 미국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지도자회의(11.15)를 통하여 자유무역과 투자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동 기구의 성격을 협의체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체제로 발전시켰다.

APEC이 주창하고 있는 開放的 地域主義는 WTO의 출범 등 世界經濟의 自由化 趨勢에 비추어 볼 때, EU가 상정하고 있는 폐쇄적인 지역국가간 경제협력보다는 議題의 多樣化와 域外國가들과의 조화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APEC의 발전과 함께 아·태지역의 경제적 力動性은 21세기 세계경제가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3) 中位圈 國家들의 浮上

1990년대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 編入하여 경제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매년 두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 2000년대에는 세계 경제강국의 대열에 進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신흥공업국(New NIES)들은 1994년에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이런 趨勢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구권의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조만간 아시아 지역국가들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위권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兩分化된 상태로부터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으로 三分化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진국들의 부상으로 그동안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왔던 세계경제 관리는 중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서 WTO는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東北亞情勢

가. 東北亞 4強의 相互關係

(1) 美·日關係

미·일관계는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일은 나폴리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7.8)과 자카르타 APEC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11.14)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협조를 약속하였다.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보각료회담(3.12)에서도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함과 동시에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여 유엔안보리에 북한 핵문제를 회附할 경우에 긴밀히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일본은 미·일 안보각료회담에서 締結된 양국간 특별협정에 따라 1995년도 일본 주둔 미군 경비를 1994년도 보다 300억엔 늘어난 1,500억엔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이 회담에서 미국측이 일본측에 요구해 온 일본 군사관련 민간기술의 대미 제공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전역 미사일방위(TMD) 구상에 대한 일본의 참여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1994년 미·일 경제관계는 양국간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실패로 상당한 緊張關係를 유지하였다. 특히 클린턴 미 대통령과 호소카와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2.11)이 통상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무역협상에서 양국간 입장차이의 핵심은 일본 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수치목표를 설정하기 위

한 包括的 貿易協商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슈퍼 301조에 의한 제재 위협 등의 對日 무역압력을 강화하였다.

미·일관계가 악화의 기미를 보이자 일본 정부는 흑자삭감과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책인 「대외경제 개혁요강」을 발표(3.29)하였다. 이 대책에는 세제 및 금융조치 확충을 통한 수입확대 계획과 금융·보험·주택토지·정보통신·유통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내수확대 및 수입촉진을 위한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 등의 세제개혁, 1991~2000년 사이 430조엔 상당의 확대된 공공투자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포괄협상 재개 및 경화된 미국의 입장을 緩和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9월 30일을 시한으로 6월 1일부터 무역 협상을 시작하여 통신과 의료기기의 정부조달, 보험 등 2개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에 합의(10.1)하였으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 및 관유리 분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일간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개방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만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數値目標 등 「客觀的 基準」²⁾을 요구하고 있다.

2) 미국측이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외국제품의 수입총액이나 시장점유율을 최근의 증가추세보다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이 요구가 과거의 증가추세를 크게 상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구이며 일본에게 실질적인 관리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95년도 양국관계는 미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계기로 미국이 대일 무역 개방 압력을 가중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면에서의 상당한 긴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政界改編이 추진되어 국내정치가 안정될 경우, 신정권은 對美 懸案을 보다 적극적으로 타결해 나가려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국관계는 정치·안보 협조관계를 기초로 전반적으로 好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美·中關係

1994년 상반기 미·중관계는 最惠國대우 연장시 중국내 인권상황 連繫 여부, 미국의 대만 지원정책 및 무역역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10.3~4)와 페리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10.16~20) 등 고위 지도자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양국간 이견이 상당부분 解消됨으로써 하반기부터 미·중관계가 진전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서 인권문제를 강조하여 온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對中 最惠國대우 부여시 중국내 인권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미 의회는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법안을 승인(1.25)하고 외교관계 수권법안을 채택(4.28)하여 티벳의 인권개선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내 인권상황을 비난(2.1)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의교가 內政干涉 행위라고 비난하고, 기존의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在所者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對美 수출중단, 정치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미국의 소리

방송」(VOA) 전파방해 중단 등에 대한 협상을 약속하고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국에 대해 양보자세를 취하였다.

1994년 상반기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였던 중국내 인권문제와 미국의 對中 最惠國待遇 연장문제는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訪中(3.11~14)과 5월 중순 아마코스트 미 대통령 특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인권개선을 약속하고, 미국은 더 이상 人權問題와 最惠國待遇 연장문제를 連繫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5.27)하였다.

미·중이 타협에 의해 인권문제와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정책을 계속할 경우 權力承繼의 過渡期에 처한 중국내 개혁파의 立地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무기수출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국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중국의 核實驗 실시(6.10, 10.7)와 대외 무기수출 문제도 미·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19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핵실험 전면 금지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핵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러 등 핵강대국들이 준수하고 있는 核實驗 猶豫體制를 무시하고 1993년 이래 3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핵실험 재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NPT 연장 및 핵실험 전면금지조약 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미국의 전

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관계를 梗塞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파키스탄에 대한 M-11 미사일 기술수출과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원 문제도 미·중관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미·중은 외무장관 회담(10.3~4)과 군축회담(10.27~31)을 통해 핵실험 금지 및 탄도미사일 수출문제에 대한 이견을 상당부분 解消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미사일 기술수출 금지협정을 체결(10.4)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1993년 8월 중국에 부과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미·중은 양국 고위 군사지도자의 교환방문을 통해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위스너 미 국방차관(3.11~14), 라슨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7.6~8), 맥피크 미공군 참모총장(9.22~24), 페리 미 국방장관(10.16~20)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徐惠滋 중국 군 부총참모장(8.15~21)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1989년 이후 중단된 미·중간 군사교류가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미·중은 중국 軍需産業의 民需轉換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와 군사정보 교류에도 합의하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정책도 미·중관계 진전에 障碍要因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 조기경보기 판매를 약속(3.2)하고, 미 의회는 「대만관계법」이 「8.17公報」³⁾에 우선한다는 법안을 통과(4.19)시켰으며, 미 국무부는 대만과 고위인사 교류 허용, 대

3) 「8.17公報」는 미 중간에 합의(1982.8.7)된 공동성명으로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점차 축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의 국제기구 가입 허용 및 주미 대만대표부의 地位格上 등 대만과의 관계강화 조치를 발표(9.8)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만 지원정책이 중국의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內政干涉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대만문제와 관련된 미·중간 마찰을 진정시키고 있으나, 대만문제는 여전히 미·중관계에 있어서 潛在的인 긴장요인으로 남아있다. 무역역조 문제와 중국의 시장개방 문제도 미·중간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1993년 중국은 미국의 제2대 무역역조국으로서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2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정(4.30)하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섬유류 제품 등 중국 상품의 對美 수출 쿼타를 감축(1.6)하였다. 중국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인하와 수입허가증제 폐지 및 對美 구매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브라운 상무장관 등 경제관료의 訪中(8.27~9.2)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對中 경제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1995년 미·중간에는 NPT 체결문제와 무역역조 및 시장개방 문제 등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 수출 금지협정 체결, 정기 군사교류 합의 및 최혜국대우와 인권 不連繫 방침 표명 등을 계기로 미·중간 군사·안보관계는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연장협상 과정에 협력할 경우 1995년 상반기 클린턴 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바, 1995년 미

·중 양국은 상호협력관계를 보다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美·러關係

미·러는 안보와 경제면에서 同伴者關係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의 친미외교를 탈피하고 獨自外交를 강화함에 따라서 현안해결을 둘러싼 양국간 대립과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미·러 해병대는 블라디보스톡 부근 해역에서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등 인도적 임무수행을 위한 최초의 합동훈련(6.18~23)을 실시하였다. NPT체제유지와 大量殺傷武器의 확산방지면에서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미·러는 북한의 核透明性を 확보하기 위하여 對北韓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5.30)을 주도한 바 있으며, 북한의 IAEA 탈퇴선언(6.13) 이후 對北韓 제재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對北韓 제재에 동참을 示唆하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중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회담을 수차 제안하였다. 러시아는 미·북간 제네바 합의서(10.21)를 한반도 핵문제의 包括的인 해결을 위한 기초로 看做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시장경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서방 채권국 「파리클럽」을 통해 러시아의 외채 상환일정을 재조정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160억 달러의 국제지원을 약속하였다. 러시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미국과의 경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러 양국은 무역협력협정을 체결(3.31)하였으며, 정상회담(10.27~28)에서 투자 및 교역 활성화에 합의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동반자 협정」을 조인하였다. 러시아의 민영화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1993년 10월 이후 약 4억 8천만 달러의 미국 자본이 러시아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 軍需産業의 民需轉換을 위하여 4,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對러 경험에서 미국의 주요한 관심분야는 에너지 자원 개발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정치·경제면에서 혼란 상태를 탈피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본 및 유럽 기업들과 100억 달러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 오호츠크해 근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협정을 러시아 정부와 締結(6.23)하였다. 또한 극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수산 가공업 및 선박수리, 모피가공과 판매 등의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협정을 체결(6.8)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아·태 지역에서도 1996년에 APEC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러는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관계 심화에도 불구하고 마찰과 대립이 부분적으로 露呈되고 있다. 이는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국익 수호와 강대국 건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연두교서」를 발표(2.24)하고 기존의 서방 추종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강대국 지위의 회복을 모색하는 獨自外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NPT의 기본원칙 준수와 유지 문제,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유지문제 등에 의문을 제기 (10.27)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확보를 牽制하고 자국의 既得權을 維持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경제면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러 경제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규모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그 이행이 遲延되고 있으며, 1994년 25억 달러에 달하였던 對러 개발원조가 1995년에는 8억 3,990만 달러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미국은 러시아 의회내 보수파의 得勢에 따른 러시아 민족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옐친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속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유엔안보리 常任理事國 地位 등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대러 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주변정세의 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미국과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大量殺傷 武器의 擴散防止, 유엔을 통한 지역분쟁의 해결 등에 共同補助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러 양국은 등소평 사후 중국의 혼란과 한반도 불안정 및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域內 安保問題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면에서 미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을 지원할 것이며, 러시아는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장벽 철폐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주도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로 1995년 미·러관계는 對北韓 경수로 지원 문제, 중국과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문제 등으로 부분적인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4) 日·中關係

1994년 일·중은 고위 지도자 상호 교환방문 및 군사 지도자간 안전보장 대화 개최(3.1) 등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過去事문제, 일본의 對臺灣 관계 격상 움직임, 엔차관 기간 연장문제 및 중국의 核實驗 등이 일·중관계에 緊張要因으로 作用하였다.

過去事문제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로 인하여 일·중간에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었다. 중국은 나가노 법무상과 사쿠라이 환경청장에 의한 태평양전쟁 정당화 발언 등 일본내 보수화 경향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중국침략시 민간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안이 全人代에 상정되고,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1995년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 表明(9.27)하고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일본의 常任理事國 進出問題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軍備增強 등 역내 역할증대와 관련된 문제도 일·중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고, 중국도 南中國海와 東中國海에 대한 제해권 장악을 기도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전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역할증대 움직임은 상대방의 안보 및 경제이익에 심각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는 바, 상호 상대방의

군비증강 문제에 고도의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國防白書 발간 등 군사정책 투명성 및 핵실험 자제를 요구(10.8)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군비증강 문제와 관련된 긴장은 안전보장대화 와 핵안전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중관계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

일본의 對臺灣 교류확대 정책도 일·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徐立德 대만 행정원 부원장의 방일을 허용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대만카드를 이용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李鐵映 등 고위 지도자의 방일계획을 취소하였다. 대만문제와 관련된 일·중간 긴장국면은 외무장관회담(9.26)에서 일본이 대만과의 교류를 비정부간 접촉에 국한한다고 보장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일·중간 경제교류는 朱鎔基 부총리의 방일(2.23~3.3)과 호소카와 일본총리의 방중(3.19~21) 등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93년 378억달러에 달하였던 일·중간 교역액이 1994년에는 4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일본의 제2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중간 경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對中 엔차관 제공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 엔차관 제공기간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으로 제한하고 차관 금액과 대상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차관기간, 금액,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995년 일·중은 1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외무장관 회담과 군사 지도자간 안보대화 및 상반기 江澤民의 訪日 등을 계기로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2004년 하계 올림픽 유치 및 WTO 가입 등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도 對中 시장진출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바, 1995년 양국은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日·러關係

일·러관계는 양국의 최대 懸案인 북방영토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회복과 경협 증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협력분야가 군사·안보면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쿠릴열도 부근 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露呈되었다.

일·러는 모스크바에서 제3차 평화조약 교섭회의를 개최(2.21~22)하였는 바, 동 회의에서 양국은 북방영토 및 양국간 인사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하타(羽田) 일본 외상의 러시아 방문(3. 19~21)을 통해 상호 우호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 니이가다에서 개최(11. 9)된 러시아 극동 및 일본 지방정부 지도자간 포럼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양국간 유대강화가 아·태지역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일·러간의 신뢰구축 노력은 양국간 이해가 일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원확보 경

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북방영토 문제해결 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군사·안보 면에서도 일·러 양국간에는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협력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신 군사독트린(1993.11)에서 「敵對國家 不在」를 선언하였고, 일본도 「1994년 방위백서」에서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에서 제외시켰다. 일·러 양국은 외교·국방 관계자가 참석하는 제2차 정책 기획협의회(2.3~4)에서 「방위정책 대강」과 신군사독트린을 각각 소개하였으며,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국방정책에 대한 透明性 보장문제 등에 협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수색 구조훈련을 최초로 실시(9.14)하였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일·러 안보심포지움(11.9)을 통해 군사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안보·군사관계의 확대를 통하여 러시아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주도를 牽制하고 역내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한편, 일본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북방영토 문제 등 러시아와의 懸案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러 양국간에는 경협도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과학기술협력회의(5.25~27)와 제2차 경제합동위원회(6.2) 등을 통하여 상호 경협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결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통신망 정비공사에 대한 일본의 2억달러 용자, 블라디보스톡 부근 해상에 러

시아 태평양함대의 핵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지원, 사할린 대륙붕 석유 채취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도쿄에서 개최된 소스코베츠 러시아 제1부총리와 고노 일본의상과의 회담(11.27)에서는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일본의 지원 강화, 러시아의 1억 8천만 달러 對日 부채 상환연기, 러시아의 WTO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 및 부총리급 쌍무무역위원회 설치 등이 합의되었다.

정치, 군사면에서 상호신뢰 강화와 경협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방 영토 문제는 양국관계 정상화를 阻害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일·러 양국은 북방영토 문제를 열친 대통령의 방일시(1993.10) 합의된 「도쿄선언」⁵⁾에 따라서 교섭하기로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동 문제의 해결은 러시아의 ‘先 경협 後 영토협상’ 입장과 일본의 ‘정경불가분의 원칙’ 입장의 대립으로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95년내 북방영토로부터의 철군 계획(1992. 10)에도 불구하고 그라초프 국방장관은 극동 군관구와 태평양 함대가 러시아 안보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방영토에 약 7,000명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임을 표명(10.24)하였고, 체르노미르딘 총리도 북방영토의 반환 가능성을 일축(11.6)하였다. 러시아는 국익수호 차원에서 북방영토 주변 해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과 선원들을 나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어업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기존 협정들에 입각하여 처리한다”

향후의 일·러관계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양국간 안보이해와 경제이익의 일치로 안보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신뢰회복이 증진되는 가운데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면에서는 1995년 1월에 예정된 다마자와(玉澤) 일본 방위청장의 訪日時 양국 국방장관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안보 대화의 수준 격상과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 등이 합의되는 등 양국간 신뢰구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은 극동지역 러시아군을 아직도 자국의 안보 불안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일·러간 군사협력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제한된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북방영토 문제는 소스코베츠 러시아 제1부총리의 방일시(11.27)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러시아 총선 이후 보수파의 영향력 강화로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 문제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阻害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자국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終戰 50주년인 199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옌첸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개혁문제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995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 中·러關係

1994년 중·러관계는 정치적으로 미래지향적 同伴者 시대를 예고하면서, 군사적으로는 軍事技術協力 關係로, 경제적으로는 産業協

力關係를 심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實利와 상호 補完性을 중심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중·러는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1.26~30)과,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의 방중(5.16~29),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6.27~29) 및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9.2~6)를 통해 선린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중·러는 江澤民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서부국경선 협정을 체결하고, 국경지역 병력감축에 합의하는 한편, 건설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9.3)하였다.

1994년 중·러관계는 특히 軍事面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중·러간에는 콜레슈니코프 러시아 군참모총장의 訪中(4.11~14), 曹雙明 중국 공군사령관의 訪러(6.2~11),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訪러(7.11~16) 등 군사 지도자간 상호 교환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구소련 해체 이후 최초로 중국 北海艦隊 소속 군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방문(5.17~21)하였으며, 국경지역 군축과 상호 신뢰강화를 위한 군사전문가 회의도 개최(5.23~6.10)되었다.

양국 군사 지도자간 교환 방문 등 軍事交流를 통해 중·러는 軍事·技術 협력 강화 및 위성산업 기술협력에 합의하고, 국경지역에서의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과 전략핵무기 배치 금지협정 체결에 동의(7.12)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 SU-27 전투기와 S-300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무기 운용에 관한 기술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중·러 양국은 전략무기 상호 불겨냥 및 핵무기 선제불사용 협정에 조인(9.3)함으로써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군사 현대화와 對美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최대 무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러는 흑하市－블라고베슈첸스크市와 중국 수분하市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교역증진 기반을 조성하였고, 경제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5.24~ 26),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5.29), 무역세관협력 협정과 무역경제협력 의정서 체결(9.3) 등을 통해 산업기술협력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러는 양국 무역을 求償貿易에서 硬貨決濟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9.3)함으로써 교역관계의 制度化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러관계의 발전추세를 감안해 볼 때, 1995년에도 중·러간에는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교류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의 軍事大國化를 우려하여 SU-35 전폭기 등 최첨단 무기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러는 사안별로 상호 協力과 牽制關係를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 東北亞 安保環境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는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추세와 危機 및 葛藤국면이 혼재하고 있다.

‘安定과 不安定’이라는 양면성은 무엇보다도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流動性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

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二重性에 기인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첫째,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둘째,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등 냉전시대의 遺産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문제를 살펴볼 때, 동북아에서는 미·러의 독점적 영향력의 감소와 일·중의 영향력 증대 현상이 상대적으로 浮刻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원하지 않으나 세계정세의 긴장완화 및 국내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등으로 인해 동 지역 주둔군의 축소를 포함한 전략적 調整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기존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여 냉전종식 이후 확보된 唯一 超強大國으로서의 地位를 동북아 지역에서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유지활동(PKO) 법안 통과후 자위대의 해외 파병,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전보장기구 설치 주장 등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 增大를 도모하고 있다. 즉 일본은 미·러의 영향력 약화, 특히 미국의 동북아정책 재조정에 따라 동북아 駐屯 미군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힘의 空白을 메우기 위한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의 기존 정치·군사·경제관계 조정, 중국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동북아 지역내의 자국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이후 改革·開放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國策으로 설정하고 융통성있는 실용주의의 교와 全方位外交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의교는 동북아 국제환경속에서 미·러의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일본과의 경제적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세계 超強大國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국내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적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기존관계 유지와 미국·일본·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最小化하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상당기간 유지·강화하면서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모색하는 미국과의 협조하에 일본 및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牽制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二重的인 현실은 1994년도에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危機이다.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1993.3.12)한 이래 초미의 현안이 된 북한 핵문제는 1년 7개월만에 제네바 북·미회담을 통하여 包括的 解決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7.8)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개최된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합의(10.21)에 도달하였다. 이는 북한 핵문제가 타결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장으로 유도하며 동북아 탈냉전구조를 형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군비경쟁문제로서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역내 국가들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위해 「제2차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1~1995)에 따라 1994년도에도 前進防禦를 위한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在來式 軍事力을 강화하고 있다. 핵 잠재력과 관련,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 룩카쇼무라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1993.4)한데 이어, 1994년 4월에는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핵무기 전환이 가능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핵에너지 이용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중국은 신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MiG-29 도입과 MiG-31 라이선스 생산 등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1994년 가을 약 90킬로톤급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만도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 2000 등 전투기 구입과 함께 對空·對艦 미사일을 최신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셋째, 일·러간 북방영토 문제, 중·일간 尖角列島 문제, 한·중·일 간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문제 등 영토·국경분쟁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 요인이 조만간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동북아 안보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潛在的 要因으로서 당사국 및 주변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북방영토의 경우 인근해역에서의 어로행위가 영해침범이란 이유로 러시아 국경경비대에 의해 많은 일본 어선이 나포되었으며, 이로 인한 선원 및 선박 인도가 일·러간의 외교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넷째, 러시아의 정치불안 가능성과 경제난, 그리고 중국과 북한내 權力承繼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불안정도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1993년 12월 국민투표와 총선거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 신헌법이 채택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1994년 러시아 정국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의 권력기반은 계속 취약한 상태를 노정하여 왔으며, 루블화 폭락사태(10.11)로 예증되었듯이 경제난이 조기 해결될 가능성도 사실상 거의 희박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고령인 등소평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995년에는 권력승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사망하였으나 김정일 권력후계 체제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경제문제와 관련, 역내 국가간 교역 증대 등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갈등의 소지 역시 증대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2.11)에서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자 양국관계가

악화 조짐을 보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흑자삭감과 수입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 시장개방책인 「대의경제 개혁요강」을 발표(3.29)하고 6~7월간 미·일 포괄경제협상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마찰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勢力均衡 變化와 역내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지역 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신뢰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역내국가들은 지역차원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도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이 구상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도 구소련 시대 이래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조하여 왔다는 점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에 대한 域內 國家들의 意圖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 기구를 통해 역내 불안정 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동 기구를 역내 진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군사 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日本과 中國은 각각 자국의 신장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美國의 경우, 균형자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등에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雙務的 同盟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

황에서 域內 危機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多者間 安保協力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補助裝置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자간 및 다자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강대국간의 이해상충으로 위기와 갈등이 부분적으로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雙務的 同盟體制와 多者間 安保協力을 並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견지하고 역내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상이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1995년에도 역내 국가들이 지역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구성에 용이하게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문제는 1995년에도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제네바 북·미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측의 성실한 이행여부가 동북아 경제안정에 주요관건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역내 국가들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역내 불안정 요인이 단기간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1995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소평이 사망하여 중국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도부내의 권력투쟁이 첨예화되는 경우, 이는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가. 韓·美關係

1994년 한·미관계는 안보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조를 보였으며, 경제면에서는 무역균형을 이루고 한국이 무역 자유화에 先導的 역할을 함에 따라 상호의존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對韓 안보공약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계속 동결시키게 하였다.

한국은 남북 특사교환이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 先行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4.15)함으로써 미국이 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한 협상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제재문제가 심각히 논의되는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6.14~18)을 개인적 자격이라는 조건하에 허용하였다. 카터는 북한이 핵개발 동결에 약속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있다는 김일성의 제의를 한국측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수락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김일성 사망(7.8)을 계기로 對北韓 관계개선에 대한 시각 차이를 露呈하였다. 김일성 사망소식을 접한 클린턴 대통령은 김일성이 대화기조로 선회한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김일성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등 북한에 대하여 宥和的인 태도를 표명(7.9)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김일성에 대한 조문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남북대화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주지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북한에 계속 설득하였다. 한편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에 대한 한국측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미국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방한(11.8 ~9)을 통하여 對韓 방위 공약의 지속과 한·미관계의 불변을 재강조하였다.

한·미간 경제관계와 관련, 한국은 APEC에서 아·태지역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先導的 役割을 하였으며, 한·미 양국간 무역관계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94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의 육류수입 관련제도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11.23)하는 등 품목별로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하였다.

미국의 중간선거(11.8) 결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은 주한미군 감축문제, 통상문제, 북·미 합의사항 등 주요 懸案의 이행방법과 강도에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문제에서 미국은 다자간 안보체제보다는 전통적 쌍무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 따라 對韓 안보공약을 유지하며 對北 억제력 강화, 한·미 군사협력 강화, 주한미군 감축시기 지연, 국방예산 감축 반대 등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대 및 對北 억제력 강화를 위한 무기도입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경제면에서 1995년에도 APEC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5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위한 업계의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전자제품 시장개방이 未洽하고 속달배달업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통상문제에서 미국은 自由貿易主義에 입각하여 한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是正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장개방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韓·日關係

1994년 한·일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정치·안보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방문(3.24~26)과 무라야마 총리의 방한(7.23~24), 그리고 APEC 정상회담 기간중 두차례의 정상회담(11.14)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韓·美·日 協助體制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북·미 제네바 합의(10.21) 이후 북한의 輕水爐 轉換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 기구의 발족 및 조직, 운영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 실무자협의(11.18)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구성을 위한 협의에서 한·미·일 3국은 비용분담이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차이를 보였다.

일·북 수교와 관련,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APEC 정상회담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11.15)에서 수교교섭 추진에 있어 한국과의 긴밀

한 협의를 약속하고 일·북 수교교섭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表明하였다.

한·일 양국간 군사분야의 협력관계도 구체화되었다. 도쿄에서 열린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청장 회담(4.26)에서 양국은 空海上 軍用機 비행계획을 事前通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전통보로 상대국 군용기로 판명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緊急發進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진행되어 온 간접적인 양국간 협력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위(TMD)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일본 정계는 유사시에 대비한 「有事立法」의 필요성 논의를 활성화하고,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의 해외 군사역할 증대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 등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10.28)시켰다.

양국의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은 제2차 한·일포럼(8.24~26)을 도쿄에서 개최하여 아·태지역과 양국간의 안보·경제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및 문화교류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이상과 같은 한·일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의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하고 1995년에는 북한의 경수로전환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협의과정에서 이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북 수교교섭과 남북대화의 진전과의 연계문제를 둘러싸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露露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韓·中關係

김영삼 대통령의 訪中(3.26~3.30)과 이봉 중국 총리의 訪韓(10.30~11.4) 등 고위층 인사들의 내왕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기존의 경협중심 단계에서 정치·안보 협력을 制度化할 수 있는 단계로 進入하였다. 한·중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협확대 방안,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안정문제, 미·북간 북핵문제의 타결로 등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의 주요논제에 대해 쌍방간 共同 理解認識의 폭을 확대하였다.

한·중 양국은 李萬燮 국회의장의 訪中(1.6)을 계기로 국회차원의 교류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한·중 문화협정 서명(3.28), 중국 교과서의 韓國戰北侵記述의 수정 용의 표명(4.13) 등으로 정치현실에 대한 공동이해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남북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위한 중국의 지원은 可視化되지 않았다.

李養鎬 합참의장과 張萬年 중국군 총참모장은 양국간 군사교류 확대 및 군사교육 분야의 교류강화에 합의(3.20)하여 무관의 상호 교환을 성사시켰으나, 중국군 고위인사의 방한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平和體制 構築問題와 관련, 북한이 停戰協定의 서명당사

자가 유엔군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군사정전위를 대신하는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를 개설(5.24)한데 대해,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정전위 대표단 철수를 결정(9.1)하였다. 중국은 평화조약 체결시 자국이 당사자임을 명확히 表明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우려, 평화조약 체결에 한국의 적당한 役割수행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 핵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한국은 관련 당사국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과 對北 제재 반대라는 중국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受容하였다. 중국은 김영삼 대통령 방중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경고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대하지 않았으며(4.1), 북한 핵개발에 대한 IAEA의 반대 결의에도 기권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 부족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4.14)하였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미국, IAEA의 4자간 대화를 제안(6.9)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受容하였다.

중국이 한국과의 경험에서 공동투자, 互惠平等, 공동위험부담, 공동시장개발원칙 등의 원칙을 표방하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한·중 양국간 경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간 직접 교역액은 1994년 전반기에 이미 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였고, 한국의 대중 투자도 더욱 확대되고 있어 1993년에 이어 1994년에도 한국은 중국의 6위 무역상대국, 중국은 한국의 3위 교역국이 되었다.

양국간 고위 지도자의 來往을 계기로 산업협력 증대를 위한 협정들도 체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訪中을 계기로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집약 업종의 對中 투자증가로 투자의 대형화와 업종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봉 총리의 訪韓을 계기로 100인승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원자력협력 등이 합의되었으며, 한국의 완성차가 예정보다 빨리 중국에 수출하게 된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정치안정을 優先示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거듭되는 한국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이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중국의 대남북한 외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5년 전반기의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김정일의 방중이 실현되면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수교 제3주년 기념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韓·러關係

한·러관계는 모스크바 정상회담(6.1~4)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同伴者關係가 구축되고 있는 바, 경제와 군사 및 과학·기술 면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경험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구소련에 제공된 경협차관의 상환문제, 구러시아 공관 부지문제, KAL기 사건문제 등이 懸案으로 남아 있다.

한·러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 청와대와 크레

물린간 핫라인 설치,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확대 등에 합의하였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6. 25 관련 비밀문서들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현재의 남북한간 휴전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表明하였다. 동회담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 주변 4강과 미래 지향적인 善隣友好關係를 공고히 하였으며, 러시아는 동북아 질서재편에 대비하여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과 경험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시베리아의 탈북 벌목공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일시적으로 한국 언론들의 과장된 보도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으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8.20)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알렉산더 슈메이코 상원의장이 의회대표단을 이끌고 방한(11.7~12)한 후 한·러 양국 국회의원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군사·안보 면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유엔 및 IAEA에서 한국과 협력하였다. 그러나 양국 외무장관 회담(4.14)시 코지레프는 러시아도 북한 핵관련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소외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4.29)을 통하여 「1994~95년 군사교류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한·러 군사교류의 一環으로 러시아 총참모대학원에 현역 장교 8명을 파견(11.10), 2년간 委託教育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제면에서는 양국간 정상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무역, 투자,

기술협력 등의 분야에서 관계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정부간 정례협의체인 「한·러 무역위원회」의 설치와 동부 시베리아의 사하(구 야쿠티아) 자치공화국내 가스田 공동개발이 합의되었다. 또한 한국의 「한·러 극동협회」와 러시아의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한국 협력위원회」는 서울에서 제3차 공동회의를 개최(4.4), 나훗카 경제특구에 한·러 협력공단과 한국 전용부두 건설 등 9개 항에 합의하였다.

과학·기술면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자의 招聘 段階에 머물러 있던 협력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주, 통신, 항공기, 신소재, 기초과학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6.3)된 제4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양국의 공동연구 9개 사업을 확정하는 議定書를 체결하였고, 러시아 현지에서 3개의 공동연구 센터를 건립하였다. 1994년에 러시아 과학자 150명이 한국에 초빙되었고, 한국의 과학기술진 1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관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국의 불안가능성, 러시아의 복잡한 세제와 수출입 규제 및 러시아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지식과 정보부족 등으로 한·러 양국간 교역과 한국의 對러 투자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러간 1994년 무역량은 2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국의 對러 투자도 3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소련에 제공된 14억 7천만달러 경협차관과 관련, 한·러 양국은 실무회담을 통해 한국의 경협차관 일부를 전차, 장갑차 등 러시아제 무기(1억 8천 5백만 달러 상당)와 알루미늄, 철강, 니켈 등

원자재(2억 2천 5백만달러 상당)로 償還받고 나머지 미수금은 러시아가 6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합의(8.29~9.4)하였다. 이로써 경협차관에 대한 한국 정부의 回收가 2년만에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연체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구러시아 공관부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KAL기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향후 한·러관계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면에서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6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지 확보에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이 대북한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일의 對北韓 접근이 가시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에 偏向되어 왔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점차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에 북한 카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와 과학기술면에서는 1995년 모스크바에 한·러 무역센터와 7개의 첨단과학 공동연구소가 설립되고, 나훗카에 100만평 규모의 한국공단이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와 함께 자원개발, 과학기술 협력 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北韓情勢

1. 對內情勢

가. 理念과 權力承繼

1994년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겪었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 약 50여년간 最高統治者로서 북한사회의 제반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지대하였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여년간 후계체제를 준비해온 金正日은 신속히 정권을 장악, 특별한 정치적 갈등없이 북한체제를 안정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 측면에서 김일성은 1994년 新年辭를 통해 주체사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같은 기존 노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개막된 전국 농업대회에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서한을 보내(2.24) 농민의 노동계급화,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농민의 혁명·노동계급화와 사회주의·주체사상에 의한 정신적 무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이념의 先次性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평양에서 개최된 「당세포 비서대회」(3.31~4.2)에서 주체사상의 고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당세포 5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에 대한 충성, 모든 당원들에 대한 주체형의 혁명가 육성, 당·대중간의 혈연적 관계 강화, 3대혁명의 적극 추진 및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전취물의 보위 등이었다.

아울러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념적·문화적 우월감을 고취시키고 정권의 정통성 과시를 위해 1993년부터 강조해온 檀君實在說과 김일성 檀君後裔論의 연장선상에서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3천년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5.20)했다. 그리고 1993년에 시작한 단군릉 개건 준공식(10.11)을 평양에서 가졌다.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 死後 최초로 「로동신문」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11.1), 사회주의의 변질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 1994년 북한은 사회주의 승리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김정일따라배우기운동’의 심화를 촉구하는 한편, ‘김정일시대’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김일성이 新年辭에서 “당의 영도밑에 철석같이 다져진 혁명대오의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공고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김정일 중심의 단결을 강조한 것이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52회 생일(2.16)을 맞아 김정일을 ‘위대한 태양’, ‘사회주의위업의 최고사령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등으로 찬양하고, 김정일은 ‘광폭정치’를 통해 “모든

인민과 혁명전사들에게 끝없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년 김정일 생일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후계자 이미지의 부각보다는 그의 영도력과 위대성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실질적 統治者로서의 위상정립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 생일은 금년 들어 김일성 생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양방송」은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지칭(5.9)하였다.

북한은 6월 19일을 김정일의 노동당 집무 30주년 기념일로 공표하는 한편, 김정일이 지난 30년간 경제, 군사, 문화·예술,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2천 6백 40여개의 주요 단위를 「현지지도」했으며 그의 현명한 영도로 이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을 기념, 6월 8일부터 교육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에 걸쳐 집중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일성은 김정일이고 김정일은 김일성’이라는 도식을 사용, 김정일과 김일성의 一體化 作業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즉시 ‘김일성유훈’의 절대고수를 표방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의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작업도 지속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김정일의 맑스-레닌주의 서적 탐독(「평양방송」, 10.22), 김정일 통일대통령추대(「중앙방송」, 10.24), 북·미고위급회담 타결의 김정일 승리(「중앙방송」, 11.6) 등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추도식(7.20) 이후 오랫동안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성공적 권력승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김일성 사망 100일째에 열린 「1백일 중앙추모회」(10.16)에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단군릉 시찰(10.29), 평양 청류다리 건설장 시찰(11.1) 등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최초로 인민최고사령관으로서의 명령 하달(11.9)을 통해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공사와 금릉 2동굴공사를 당창건 50주년(1995.10.10)까지 마칠 것을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에 촉구하였다. 제도적으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정무원에 대해 명령할 수 없다는 사실은 김정일이 사실상 주석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1995년 북한은 理念 및 承繼體制와 관련,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도이념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개방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사조와 다당제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시장사회주의 등에 대한 경계와 비판을 통하여 인민들에 대한 思想統制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체제이완 및 심리적 해이현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지위에 대한 승계를 이룩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地位鞏固化를 위해 자신에 대한 우상화작업과 유일지도체계 강조, 간부의 충성심 제고, 당원자적심사 강화 및 주민재등록사업 실시 등의 사업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나. 經濟事情과 經濟開放

북한은 1993년 12월 노동당중앙위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향후 2~3년을 완충기로 설정,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 등을 중점적 경제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1994년 들어 일부 당·정·경제기구를 개편하고 정무원의 경제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경제난 타개에 부심하였다.⁵⁾ 그러나 북한의 經濟沈滯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북한경제는 총체적인 경제성장지표인 경제성장률에서 1990년 -3.7% 負의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로 4년 연속 경제후퇴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에도 負의 성장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205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904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1994년도에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1990년대 북한의 實質經濟成長率 추이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연평균
성장률	-3.7	-5.2	-7.6	-4.3	-5.2

출처: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3);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4)

5) 북한은 1993년 12월 김달현 국가계획위원장을 해임하고 홍석형을 임명하는데 이어 1994년 1월에는 김재를 임업부장을 이춘석으로 교체하는 등 정무원 경제책임자 6명을 경질하였다. 또한 당·정기구 5개를 폐지하고 6개를 신설했다.

3대 중점경제전략에 관련한 1994년도 북한경제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제일주의 방침의 관철과 관련,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을 1993년의 2.8%에서 1994년 6.0%로 대폭 증액시키고 투자재원을 「농촌4화」⁶⁾ 가운데 특히 기계화·화학화에 집중投入하였다. 그러나 트랙터공장, 화학비료공장 등 연관산업부문의 생산설비 확장 내지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에 기인한 기존 설비의 정상적 생산활동도 부진하여 농업부문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에 따라 1994년의 농업생산도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 수급사정을 보면 1993년의 경우, 총식량 수요량은 658만톤이나 1992년의 곡물생산량 427만톤과 1993년 곡물수입량

〈표 2〉 북한의 食糧需給實態

(단위 : 백만t)

연 도	1991	1992	1993	1994	
수 요	6.40	6.50	6.58	—	
공 급	생 산	4.81	4.43	4.27	3.88
	수 입	1.30	0.83	1.09	—
부 족 량	0.29	1.24	1.22	—	

주 : 각 연도의 곡물총공급량 중 생산은 전년도 수치임.

출처 :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3 ; 한국은행, 「1993년 북한GNP추정결과」, 1994.

6) 「농촌4화」는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 전기화이다.

109만톤을 합한 총공급량은 536만톤에 그쳐 122만톤의 식량이 不足하였다. 1994년에는 1993년 곡물생산량이 388만톤으로 감소하였고 1994년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음에 따라 식량난은 더욱 惡化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⁷⁾

둘째, 경공업제일주의 방침과 관련하여 북한은 경공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을 1993년 4.0%에서 5.4%로 상향 책정하고 기존의 중앙경공업공장과 지방공장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경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공장·기업소의 조업과 함께 노후시설의 交替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內需用 생산부문의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고 수출품 생산기지 확대·강화 및 생산품 품질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나 1994년 상반기 중의 무역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북한의 무역실적을 보면 對中國 무역은 전년 同期의 4.3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22.0% 감소하였고, 對日本 무역은 전년 동기의 2.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16.8%가 감소하였으며, 對러시아 무역 실적은 1994년 1/4분기 중 1,210만 달러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43.7% 감소하였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교역은 1991년 이래 매년 상승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4년 중 교역규모가

7) 최근 북한의 곡물수입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북한 총곡물수입 83만톤 가운데 65만톤, 1993년의 109만톤 가운데 99만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1994년 상반기(1~5월) 중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규모는 1993년 같은 기간의 6,081만 달러 보다 87.8%가 감소한 744만 3천 달러였다.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香港: 香港經濟導報社, 各년도).

크게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중국의 건설수요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또한 중국측의 硬貨決濟 거래요구가 강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표 3〉 1994년 상반기 북한의 주요 國家別 交易實績

(단위: 천 달러, %)

구분	중 국	일 본	러 시 아	남북교역
총교역 규 모	336,477 (431,190)	181,733 (218,471)	12,100 (21,492)	82,394 (95,522)
수 출	115,622 (116,460)	110,539 (112,477)	—	73,758 (93,800)
수 입	220,855 (314,730)	71,194 (105,944)	—	8,636 (1,722)
증감율	-22.0	-16.8	-43.7	-13.7

주: ()내 수치는 전년 동기 실적, 러시아는 1/4분기 실적
출처: 통일원, 「'94년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1994.11).

한편 북한은 경제난 打開을 위해 外資誘致 관련 법령에 대한 추가정비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1994년 1월 「합영법」을 개정하고 2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시행규정」을 制定하였다. 또한 「외국인 기업법 시행규정」(3.27), 「자유무역항 규정」(4.28),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6.14), 「외화관리법 시행규정」(6.27), 「토지임대법 시행규정」(9.7)을 제정하는 등 외국 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法的 투자환경 개선에 努力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일,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일부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냉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판단하에 핵·경협연계 완화조치를 발표(11.8)하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곧,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11.10)를 통해 북한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對南經濟교류 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회장 이성록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가 차례로 북경을 방문하여 남한 기업인들과 비공식적 접촉을 가졌을 때 적극적인 對北投資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국투자유치 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① 정치적 위험부담, ② 통신, 항만, 전력 등 社會間接施設의 미비, ③ 협소한 북한의 內需市場, ④ 대외채무 지불지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유지 우선의 기본원칙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투자기업 운영상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에도 북한

이 적극적인 체제개혁을 모색할 가능성은 적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持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합의(10.21)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對미·일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다.⁸⁾

다. 逸脫行爲 및 社會統制

1994년 북한에서는 부정부패, 암거래, 시베리아 벌목노동자의 탈출 등 사회일탈현상이 줄어들지 않았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던 암거래, 범죄, 매춘 등 각종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각 시·도 지역별로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組織하여 1991년 12월부터 2년 동안 전국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만성화된 경제난과 암시장의 형성으로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물품을 빼내고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는 등 사회·경제질서 문란행위는 늘어났다.

암시장, 밀수, 물물교환과 같은 私的 영역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돈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의식도 달라졌다. 黨員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는데도 뇌물이 필요할 정도로 돈의 위력이 강해지자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절취, 줌도둑 등 物質主義에 기초한 사적 일탈행위는 한층 증가하였다. 돈의 효용성이 높아지자 돈을 벌기 위

8) 클린턴 美행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기본합의문에서 향후 3개월 이내 통신서비스와 외환거래금지 조항을 포함한 대북투자 및 교역장벽을 완화하기로 약속하였다.

한 목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베리아 벌목노동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美國務部가 「'93 연례인권보고서」(2.1)를 통해 북한이 세계에서 인권탄압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지적한데 이어,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의 송호마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고상문씨를 비롯한 55명의 명단과 수용소 위치 등 북한의 구조적 사회통제의 실상을 폭로(7.30)하였다.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8.2)하였으나, 북한의 주민생활은 더욱 강압적인 사회통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의 逸脫行爲는 사회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체제를 이탈하는 脫北者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베리아 벌목장에 파견되었던 노동자들 중 60~80여명이 탈출하였으며 그 일부는 남한으로 귀순해오는 등 이완된 북한사회의 단면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유학생의 남한귀순에 이어 강명도(강성산 총리 사위), 조명철(김일성대학 경제학과 교수, 전건설부부장 아들) 등 사회고위층 인사 및 엘리트 자녀들의 잇따른 탈출행위는 일탈현상이 상부 계층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라 朝·中 국경을 통한 남한의 발전상 및 외국관련 정보의 유입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난과 상호 작용하여 북한주민의 思想動搖와 社會紀綱 解弛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학생, 해외 상사원, 외교관, 북한방문자, 중국거주 조선족 동포, 시베리아 벌목노동자 등은 外部情報 유입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쟁분위기 고취, 김일성 사망 추모행사, 非轉向 長期囚 송환을 촉구하는 군중집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결속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직총중앙위 제6기 제27차 전원회의(1.12~13), 농근맹 제7기 제21차 전원회의(1.19~20), 여맹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20~21)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일이 지시한 각급 근로단체들의 인간개조사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조직·사상 지도를 強化하였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 공식논평(3.19)을 통해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하고 직총성명(3.24), 사로청 대변인 성명(3.24)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상적 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全軍에 비상령을 하달하고 등화관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쟁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체제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黨創建 이후 최초의 「전국당세포비서대회」를 개최(3.31~4.2)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조직화 등 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년단 제5차대회를 개최(6.6)하여 제국주의 반동들의 反社會主義 책동에 맞서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소년단원들은 총폭탄이 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7.8)으로 인한 사상동요와 체제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社會統制를 더욱 강화하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 발생한 북한내 김정일타도 전단살포와 관련하여 공항, 항만 등에서 출입국 휴대품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김일성 애도기간을 연장하

고 추모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북한은 「사로청원들의 맹세모임」(8.11)을 비롯하여 전국의 직맹, 농근맹, 여맹 등 3개 직업동맹원들이 참석한 「근로단체 일군들의 충성맹세모임」(8.17)을 개최하였으며, 김일성에 대한 「1백일 중앙추모회」(10.16)에 이어 청년학생들의 「추모회」 및 각 도·시·군 단위의 「추모회」를 추진하여 내부결속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등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촉구하는 군중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를 통해 김인서, 함세환 송환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8.13)한데 이어 평양시 군중집회(11.15), 평양시 청년학생집회(11.18)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결속과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誘導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군릉 개건 준공식(10.11)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민들에게 선전하였다.

북한은 체네바 北·美 핵협상의 성사로 북·미관계가 개선, 개방체제로의 돌입이 임박해짐에 따라 사회적 이완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남 적개심을 한층 고조시킴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북한은 「민민전」, 「범민련」 등과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대남비방을 강화하였는 바, 이는 북·미관계 개선 이후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상대적으로 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 자본주의를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주의’로 규정하

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要素임을 재차 강조하는 사상교양을 전개하였다.

라. 軍事動向

1994년에도 前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부문 최대 이슈는 핵 개발 의혹에 대한 IAEA 사찰 문제였다. 북한은 핵무장국가에 준하는 영향력을 보유하면서 對美協商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북·미간 핵협상이 일단 타결점을 찾게 되었으나(10.21) 북한의 과거핵문제에 대한 의혹은 상존해 있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그들의 군사력 증강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 1호 개발에 성공(1993. 5, 발사시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사거리가 최대 2,000km로 연장된 신형 미사일 노동 2호를 開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사거리가 각각 2,000km, 4,000~6,000km에 이르는 대포동 1, 2호 미사일이 북한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북한은 무기체계를 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軍事力 增強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발간한 國防白書(1994~95)에 의하면, 북한은 T-62 전차를 개량한 천마호를 자체생산하고 전차에 반응장갑을 부착하는 한편, AT-4(TOW형) 대전차 미사일을 생산하여 전차에 장착하였다. 또한 전체 야포 중

52%를 자주화하는 가운데 전방 군단 및 사단의 포병장비 일체를 자주화하며,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집중생산 및 전방배치 등을 통해 일련의 무기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 발표(12.10)에 따르면, 1994년 북한은 240mm 방사포를 126문에서 166문으로 32% 증강시켰으며 슈퍼건으로 불리는 170mm 야포도 1백여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거리가 43~54km인 이들 방사포와 슈퍼건은 서울을 직접적인 射擊目標로 할 수 있으며, 특히 240mm 방사포는 12발 동시 발사용으로 일정한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이다.

또한 전술부대의 방공무기도 현대화하여 23mm 및 37mm 자주곡사포를 생산·배치하는 한편, 적기의 후미에서만 공격이 가능한 SA-7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이어 전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한 SA-16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생산·배치함으로써 북한의 防空能力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북한은 AN2기의 개량생산과 무인항공기 생산 및 MiG-29 전투기의 조립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잠수함 및 유도탄정 등 전투함정도 계속 건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방 장거리 포병갱도 및 비행장 지하격납고 활주로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군수공장의 地下化 공사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증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戰力의 특징이 대부분 단시간내 남한의 주요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奇襲麻痺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의 군사협력 측면에 있어서 1994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군

사대표단을 중국에 派遣(6.6~6.13)하였다. 同 대표단은 이를 통하여 양국간의 군사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 요룡방 대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군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10.24)하여 양국간의 군사적 우의를 다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1994년 북·러간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적대국가로 간주하였으나, 김일성 사후 옐친 대통령이 파노프 특사를 파견(9.20~24)하는 등 對北韓 관계의 회복을 모색하자 현재는 러시아를 우호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북한은 내부체제 단속과 김정일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력 증강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기습마비전략에 상응하는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습마비전략은 전쟁발발시 승리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 협상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기습마비전략을 포함한 대남도발이나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그의 정권승계를 鞏固化하기 위해서 당분간 주변 강대국, 특히 미·일과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 主要 對外動向

가. 北·中關係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체제의 安定을 기함으로써 균형된 남북한 공존관계가 한반도에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을 평화적으로 타결하여 국제적 제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期待해 왔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자주외교를 추구해 왔다고 하나,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는 한도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그 결과 1994년 北·中關係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였다.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1994년 북·중 관계는 양국의 우호관계 지속차원에서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1.15)하였다. 황장엽의 중국 방문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방중(1992.5) 이후 최고위급 북한인사의 방문으로서 북·중관계의 호전을 알리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황장엽의 訪問에서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양국의 전통적 친선은 모택동, 주은래 동지들이 김일성 동지와 함께 맺어준 것이고 피로서 맺은 것”임

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인민무력부 주최로 평양 옥류관에서 중국군의 6·25 참전 44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10.25)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교종희 중국대사는 “김정일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있기를 바란다”고 함으로써 김정일의 政權承繼에 대한 지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도 1994년에는 북·중간의 우호적 관계 지속을 알리는 상호 교류가 있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6.6~6.13)하여 강택민 총서기, 지호전 국방부장, 유화청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고위인사들을 예방하고 ‘조·중 친선협력과 혈맹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하였다. 또한 당중앙 군사위원 오룡방 대장을 단장으로 하는 人民軍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지호전 국방부장과 장만연 총참모장을 면담(10.24)하였다. 특히 이는 북·미 핵협상 타결(10.21)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군인사 교류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의 지하 핵실험(6.10)에 대해서 북한은 이를 “미국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자위조치”라고 옹호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6.13)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표명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위협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우호적 입장을 誘導해 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자주권’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간접적으로 성토했으로써 국내외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對北制裁를 반대하였다.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일본 NHK 방송과의 기자회견(6.10)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도이며 근본 출로”라고 밝혔다. 북·미 핵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배후에는 중국의 對北韓 설득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중간 교역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상반기 중 교역규모는 3억 3,648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22.0% 감소되었다. 북·중간 교역규모 감소는 중국측의 硬貨決濟 거래요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위원장은 방중시 길림성 당국과 「새별·훈춘 철도연결 및 나진항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측의 자본·기술로 청진 동항 확장공사 및 청진-회령간 도로확장 공사가 着工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1995년 북한이 개방정책을 적극화할 경우 북·중관계는 중국의 협력을 중심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일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경제적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遂行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한 경제협력 방향에 있어서도 중국은 나진, 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 조성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 北·러關係

북·러관계는 1990년 한·소수교 이후 한동안 소원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93년 중순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94년 러시아는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과 김일성 사후 북한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緊要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내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북·러관계에는 카라신 외무부 대변인이 밝힌 것 처럼(11.12), 이념적 연대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1994년 北·러關係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는 북한 핵개발 문제, 시베리아內 북한 벌목공문제, 제네바 北·美會談 타결 이후 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 등이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하에서 미국 주도의 對北 제재조치 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 예프스타피에프 러시아 대외정보처 국장은 북한이 국제압력과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핵개발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1.14)하였으며, 미하일로프 러시아 에너지부장관은 북한이 일부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원폭 제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6.17)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제재 조치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국제적 對北制裁 조치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라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정

책이 NPT에 부합하도록 외교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1.4)하였다.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관련, 미·러·중·북이 대화에 임하는 「4자 회담」(3.21), 남북한·미·일·러·중과 유엔 및 IAEA를 포함하는 「8자 회담」(3.24),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추가한 「10자 회담」의 개최를 잇따라 주장(6.23)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막판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對北 경수로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하였다. 특히 북·미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자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형 경수로를 도입하는 것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비적대적인 관계를 고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베리아내 북한 벌목공의 인권 및 남한 탈출문제는 북·러관계를 긴장시켰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장에 관한 협정연장의 조건으로 북한이 벌목노동자들의 러시아 국내이동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3.19)했으며,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차관은 북한 벌목공들의 한국망명 허용 의사를 밝히기도(4.8)하였다. 이어서 러시아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출 북한벌목공에 대해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한국 귀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8.22)하였다.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또한 북한 벌목공들의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될 새로운 양국 임업협정을 곧締結할 것이라고 밝혔다(8.23).

북·러간의 또 다른 현안은 1996년에 만료되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갱신문제이다. 쿠나제 러시아 외무부차관은 북

한이 외국의 攻擊을 받을 경우 러시아의 자동개입을 규정한 조항을 수정할 의사를 시사(1993.1)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부당한 외침을 받을 경우 러시아정부는 舊소련-북한간 동맹조약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을 밝히기도(3.29) 하였다. 그러나 모이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한국과장이 한반도내 군사분쟁 발발시 러시아가 즉각 북한을 지원할 義務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4.22)으로 보아, 동조약의 갱신문제는 1994년 한 해 동안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과 북한 핵문제 타결 이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호의적 접근은 강화되고 있으며, 열친의 特使資格으로 평양을 방문(9.20~24)한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차관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可視化하기에 이르렀다. 파노프는 러시아형 경수로 지원에 대한 희망을 구두로 전달하고, 국회간 교류를 통한 양국 정치관계의 복원, 經協의 확대, 이종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 북한의 경제특구 진출, 경수로 지원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동북아에서 미·일의 일방적 이익확보를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북·러 정치관계는 점차 發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러 경제관계는 양국의 경제난, 북한의 대서방 중심 정책 추진 가능성 등으로 단기 간내에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북·러 양국은 기존의 同盟條約을 탈냉전의 국제적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서 제한적인 군사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北·日關係

1994년 北·日關係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인하여 냉각 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양국간의 수교교섭 회담은 8차회담(1992.11) 이후 약 2년 이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경제교류도 萎縮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지속과 特別査察 관철에 대한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북·일은 냉각관계를 지속하였다. 1994년 일본은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사회당을 주축으로 하는 연립내각으로 정권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북·일관계에도 전향적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호소카와 日本總理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韓·美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방침을 거듭 강조(1.7)하였다. 한편 하타 외상은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1.9)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立場은 하타 외상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 강조(2.16), 사이토 외무차관의 韓·美·日 공조체제 유지 강조(2.18), 다케무라 관방장관의 안보리 對北制裁 조치 결정 대비 강조(3.22), 호소카와 총리의 안보리 의장성명 지지(4.1), 하타 新內閣의 북한 핵연료봉 교체 중단 및 전면사찰 수락 촉구(5.19, 5.31) 등으로 반복·강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對日 비난공세를 강화하였는 바, 일본이 군비증강, 자위대 해외파병, 핵무장화 계획 등 軍事大國化 책동을 포기하여야 할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일본 핵무장화 비난 담화(2.4), 강석주 외교부 제 1부부장의 반박(8.18) 등에서 거듭 나타났다.

자민·사회·신당 사키가케의 3당 연립정권으로 6월에 출범한 무라야마 내각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강조(6.30, 7.9, 7.20)하였다. 김일성 死亡에 대하여 무라야마 총리는 사회당 총재 명의로 조전을 발송(7.12)하였으나, 고노 외상은 북한의 과거 핵문제에 대한 규명을 거듭 주장(9.6, 9.22)하였다. 북한은 사회당 중심의 연립정권 출범을 환영(7.1)하였으나, 무라야마 內閣이 핵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이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교섭 재개를 위하여 막후접촉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4~5월에 중국 및 싱가포르 등에서 대북 접촉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기독교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일본 사회당(6.11~13) 및 자민당 대표단(6.14~18)의 訪北,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대표단(7.5~12) 및 학술교류 민간 방문단(8.7~16)의 訪北을 통하여 대화 통로 구축 및 대북 교류를 모색하였다. 북·일은 북경에서 수교교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8.23~25)을 재개하였고, 후카와 사회당 의원 및 이노키 평화당 의원의 방북(9.6~10)을 통하여 대북 수교협상 재개를 모색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1994년 상반기 북·일교역은 전년 동기의 2.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16.8%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의 對日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인 바, 북한의 對日 수입은 전년 대비 32.8%, 수출은 1.7% 감소하였다. 이 기간 북·일 교역의 특징

은 첫째, 1991년 이후 점진적 감소 추세에 있던 양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수출품목이 수산물, 석탄, 철광석 등 1차산품 및 봉제의류 등 단순 가공제품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輸入品目 가운데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용 기자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건설용 기자재의 수입 급증은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과 연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5년 북한의 핵문제가 北·美간 基本合意文의 틀 속에서 해결되고 북·일간 수교교섭이 재개되는 경우, 경제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은 북·미 합의에 따라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라는 立場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일 수교회담을 재개하더라도 북한측에 북·미간 기본합의문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과거 핵의혹에 대한 규명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 수교협상은 핵문제 이외에 보상방식 및 액수 문제, 구조약 효력 등의 역사해석 문제, 이은혜 문제 및 재일 조총련 대우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해 있다. 따라서 1995년 북·일 수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일관계 진전에는 難航이 예상된다.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은 북·일 수교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조총련계와 북한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들의 對北 진출도 정치적 관계개선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기업들은 800억 엔에 달하는 북한의 對日 채무 문제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현재 對北 經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양국 수교협상에 따른 일본의 배상

금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와 향후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공급 루트 확보차원에서 對北進出을 점차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北·美關係

1994년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문제 협상을 위한 양국간의 접촉을 중심으로 진전되어 왔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北·美 高位級會談(1993.7.14~19)에서 양국은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문제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였고 이에 따라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1993.8~1994.2)해 왔다. 查察範圍 및 方法 등에 대한 북한·IAEA간의 합의(2.15)에 근거하여 IAEA는 대북사찰을 실시(3.1~15)하였으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 활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었다. 北韓 核問題가 유엔안보리에 회부(3.21)되어 추가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안보리의장 성명」이 채택(4.1)되자, 북한은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5.17)함으로써 또 다시 國際的 制裁 局面을 자초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對北制裁 決議案을 채택(6.10)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6.13)함으로써 北·美關係는 매우 경색되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核凍結 약속이라는 宥和策을 제시하여 미국으로부터 제3단계 北·美 高位級會談 개최 합의를(6.23)를 유도했고 3단계 제1차 회담(8.5~13)과 2차 회담(9.23~10.17)을 통해 핵 협상을 妥結하였다. 북·미간 기본합의문에 천명된 북한의 핵동결 약속, 對北 경수로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등

의 내용을 다루기 위한 후속 전문가 회담을 통하여 북·미 양국은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에 합의하였다. 즉 ① 합의 후 3개월내(1995.1.21 부터)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가며, ②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③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맞추어 양국관계를 大使級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1.25)과 카터 前 미대통령의 김일성과의 회담(6.15~18)은 인적교류를 통하여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카터 前 미대통령의 방북은 비록 個人資格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前職 대통령의 방문인 점을 감안할 때 양국간의 접촉수준이 격상되었다는 외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美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머코우스키와 폴 사이먼 의원이 미군용기편을 이용하여 방북(12.11)함으로써 휴전 이후 미군용기의 첫 평양행은 북·미관계 개선의 상징적 契機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군 헬기가 비무장지대 북한지역에서 추락한 사태가 발생(12.17)하였다. 이에 북한은 사망한 조종사의 유해를 송환(12.22)하였으나, 생존한 조종사를 아직 송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군 조종사의 신변인도에 관한 회담을 공식적인 판문점 군사정전위 대표형식이 아니라 북·미 양측 군사대표 형식으로 개최할 것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북한이 향후 대미관계 개선과정에서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강

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한은 미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차관보급 인사를 파견하면 조종사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12.26)하였다. 이에 토마스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미군 조종사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12.28)하였는 바, 조종사 송환협상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조종사 送還協商을 미국과의 고위 정치회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最大化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5년 북·미관계는 핵문제로 인한 양국간의 관계개선 동결상황이 해제된 만큼 정치·경제부문을 비롯한 인적교류 측면의 활동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連絡事務所 開設은 제2차 전문가회담(12.6~9)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995년 4월 이전까지 양국의 수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5년 6월로 갱신되는 NPT체제에 북한을 잔류시키기 위해 連絡代表部를 4월 이전에 개설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連絡代表部 개설을 위해 對北 금수조치를 부분 또는 전면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외원조, 외환, 통신 등 3개분야에서 제1단계 제재 완화조치를 連絡代表部 開設 이전에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4년 동안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미국측이 제시해야만 하는 약속사항은 미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건설지원 및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대체에너지(중유) 공급문제 등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11.8)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클린턴의 對北政策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특히 미국의 對北韓 중유공급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올 수 있다.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 시기에 있어서도 공화당이 이의를 제기해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양국이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3. 對南戰略

북한의 對南戰略은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는 동시에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 선언 이후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主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

1994년 북한은 南韓 內部的 분열을 기도하기 위해 對南誹謗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4.28)하여 「주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전술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직전 북한은 南北頂上會談에 적극성을 보여 이러한 대남전략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對南誹謗 강화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남조선의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력대 군부독재 〈정권〉과 다른 것이 없다”고 강도높

게 비난한 이래 문민정부 타도를 본격적으로 선동하였다. 「로동신문」은 12차례에 걸쳐 “김영삼 반역 「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는 시리즈물을 게재(2.17~3.6)한 바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 文民政府 출범 1주년, 4.19, 5.18 등에 즈음하여 발표한 각종 단체의 「고발장」, 「선언문」, 「호소문」 등과 「4.19 평양시 기념보고회」, 「5.18 평양시 군중대회」 등을 통해 남한내 反政府 鬭爭을 적극 선전·선동하였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면서 대남비방을 일시적으로 자제하였으나, 김일성 사후 남한 정부가 김일성 弔問 금지조치를 취하자 「한민전」 대변인 담화(7.15)를 통해 “초보적인 예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이후 대남비방을 한층 강화하였다.

둘째, 統一戰線戰術과 관련하여 북한은 이기택 민주당대표 방북 환영 담화발표(1.15), 문익환 목사 조문단 파견제의(1.20), 남북 천도교간의 「동학농민운동」 100주년 (3.21) 기념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접촉(1.24) 등을 提議하였다. 또한 북한은 「10대강령」 1주년 기념 「정치인·학자·언론인 연구토론회」(4.1)에서 “김정일을 조국 통일의 구심점”으로 하여 “김정일의 영도에 따른 90년대 통일실현”을 강조하였다. 이후 「10대강령」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4.11)를 개최하여 全民族의 大團結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민족대회」 소집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訪北 환영 담화(7.14),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8.13~15), 단군릉 준공식에 대한 남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초청 서신 발송(9.25) 등을 통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한편 김일성 사후 북한 대남정책의 基本方向은 김일성 추도대회와 국가수립 4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9.9) 등을 통하여 「통일3원칙」 및 「10대강령」을 구현하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천하는데 있다. 북한은 통일의 기본강령인 「3대원칙」 가운데 自主原則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남한당국의 외세의존 저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平和統一原則의 기본 요구는 한반도에서의 틱스피리트 훈련 중지 등 전쟁위험 제거 및 남북간 자기 제도의 불강요이다. 각당, 각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이념, 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民族大團結原則은 「10대강령」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대원칙」과 「10대강령」의 고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기존의 二重的 對南政策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의 對南政策을 계승·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체제 공고화와 폐쇄사회 유지, 對美 직접협상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 실천과 같은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북한은 1995년의 분단 50주년에 즈음하여 그 어느때 보다 대대적인 平和攻勢를 전개하며 統一戰線戰術을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국내 일부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연방제

통일선전과 함께 정치협상회의, 8.15 범민족대회 공세 등을 강화하는 한편, 단군릉 발굴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민족정통성을 내세우면서 文化合作 명목의 통일전선공세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대강령」에 입각하여 정신대문제, 일본의 핵무장문제 등과 관련하여 남북민간차원의 반외세 공동대처 선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활용하여 북한 출신의 在美僑胞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을 거론하여 남한내의 國論分裂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1995년에 들어 북한은 對美·일 관계개선 및 정권 공고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나마 南北對話에 호응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南北對話 재개시 남북한 쌍방의 우선적 과제가 각 공동위별로 附屬合意書를 실천단계로 진입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의 즉각적 실천을 유보한 채 실리추구 측면에서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招來하지 않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례조치」라는 명분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은 화해 및 불가침분야에 있어서는 미합의사항을 근거로 기존의 對南戰略을 고수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장하려 하는 반면, 특히 경제교류·협력분야에서는 경제난 解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實益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공동위 가동과 함께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북한측의 對南政策에 부응하는 「년차별·분기별 시행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南北韓關係

1. 核問題

북한과 IAEA는 비엔나에서 북한 핵시설의 구체적인 査察方法에 대한 협상을 재개(1.7), 2월 중순까지 6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양측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북한의 NPT 회원국 지위에 대한 異見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은 NPT 탈퇴결정을 잠시 留保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IAEA의 모든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찰만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IAEA는 NPT 탈퇴결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북한은 NPT 정회원국이므로 전면적인 安全措置(full-scope safeguards)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IAEA의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이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수용을 결정(2.15)함으로써 북한 核問題가 다시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IAEA의 對北 査察은 방사화학실험실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실시(3.3~14)되었다.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내 글로브 박스(glove box)에서의 샘플 채취와 감마선 지도작성(gamma mapping)을 거부하였는 바, 글로브 박스의 샘플채취는 새로운 플루토늄의 추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며, 감마선 지도는 새로운 核物質이 방사화학실험실내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IAEA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한 필수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1993년 2월 이후 핵물질의 전용이나 再處理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IAEA 이사회에 보고(3.21)하였다. 같은 날 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다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였으며, 유엔安保理 5개 상임이사국은 북한이 합의(2.15)한 IAEA 사찰수용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과(4.1)시켰다. 同 議長聲明에서 안보리는 남북한에 대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과 관련 당사국간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한국은 北·美 협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강력히 거부해 온 特使交換 요구를 철회(4.15)하였다.

이후 북한은 5월 4일부터 핵시설 감시용 카메라의 필름과 건전지의 교환 및 봉인훼손 여부 확인 등 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여 사찰의 連續性을 보장하였다. 또한 3월에 실시된 사찰에서 거부했던 방사화학실험실내 글로브 박스에서의 샘플채취와 감마선 地圖作成도 허용하였다. 同 査察을 통해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최초로 수용한 1992년 5월 이후 핵물질을 불법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對北制裁 論議와 北韓의 IAEA 脫退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

출하고 IAEA의 임의선택과 분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북한 核問題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을 채택(5.30)하였으나,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韓·美 양국 등 북한 핵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制裁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폐연료봉의 임의추출은 5MW 原子爐의 과거 운전역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과거 핵활동 규명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듦으로써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韓·美 양국을 자극했던 것이다. 북한은 대북한 유엔제재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IAEA에서 공식 탈퇴(6.14)하였다.

유엔의 對北制裁 결의안 채택 움직임으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카터 前 美國大統領의 북한 방문(6.15~18)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카터와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해 주고 핵위협 중지를 보장하면 核開發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 결과를 토대로, 北·美間에 3단계 1차 고위급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8.5~12)되었다. 3단계 1차 회담은 원래 7월초에 열렸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死亡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이다.

3단계 1차 회담에서 北·美 양국은 ①북한의 핵개발 동결(흑연감속로 건설 중단 및 방사화학실험실 봉인)과 미국의 경수로 지원, ②워싱턴과 평양에 외교대표부 설치, ③미국의 對北韓 핵불사용 보장과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④북한의 NPT 잔류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등 4개 原則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로 3단계 2차 회담(9.23~10.17)에서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基本合意文(Framework Agreement)을 채택(10.21)하였다.

(2) 北·美 제네바 基本合意文

북·미 기본합의문은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의 핵시설 해제 및 미국의 對北 경수로 지원 문제를 다룬 제1장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와 총 2,000MW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룬 國際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합의문 서명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합의문 서명후 1개월내에 ①5MW 연구용원자로, ②50MW 흑연감속로, ③200MW 흑연감속로, ④방사화학실험실, ⑤핵연료제조공장 등 5개 핵시설을 凍結하고, 동결상태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며 이들 시설을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전히 解體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5MW 원자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봉은 북한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둘째, 北·美間 정치, 경제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룬 제2장에서 北·美 양국은 합의 후 3개월내에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이후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상호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大使級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문제를 다룬 제3장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

기 불위협·불사용을 공식 보장하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넷째, 국제적 核非擴散 문제를 다룬 제4장에서 북한은 NPT에 완전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며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북한에 반입되기 전에 과거 핵의혹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기본합의문 이행은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한다고 발표(11.1)하였으며, 이어서 유엔安保理가 IAEA에 북한 핵활동 동결에 대한 監視權限을 공식 부여(11.4)했다. 또한 기본합의문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다루기 위해 北·美間 전문가 협회가 3개분야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미국 핵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11.12~19)하여 폐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북경에서는 경수로제공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최(11.30)되었다. 또한 워싱턴에서 連絡事務所 개설을 위한 협회가 진행(12. 6~10)되었다.

(3) KEDO 設立을 위한 協議

韓·美·日 3국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합의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12.16)하고, ①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한국형임, ②1995년 2월 KEDO를 발족하고 본부를 뉴욕에 설치함, ③3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되 가급적 많은 국가들을 KEDO에 참여시킴 등의 사항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1995년 상반기에는 北·美 기본합의문 移行體制를 정식 출범시키기 위한 관련국간 구체적인 협회가 계속될 것이다. 우선 韓·美·日을 중심으로 KEDO의 구

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후 북한과 KEDO 간의 경수로건설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비용 분담에 대해 관련국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1994년 11월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共和黨이 압승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北·美 합의서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한국이 당초 합의와 달리 과도한 財政分擔을 떠맡도록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과거 핵의혹 해소문제가 쟁점으로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핵의혹은 北韓이 IAEA 사찰을 수용하기 시작한 1992년 5월 以前까지 생산한 핵폐기물의 量과 이를 재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북한이 보유가능한 플루토늄의 최대량은 8.5~12kg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양은 西方 情報當局이 모든 조건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추정된 수치이다. 한·미 양국내에서 기본합의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당초 北·美間 합의와 달리 북한에 대해 과거 핵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美國으로부터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핵카드인 과거 핵의혹 문제를 쉽게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군헬기의 非武裝地帶 추락사건(12.17)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북·미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4) NPT 延長會議

한편 NPT의 효력 연장문제를 협의하는 NPT 연장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1995.4.17~5.12)이다. 1995년도 연장회의는 國益을 앞세운 각국의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조약의 무기한 연장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5개 核國들과 기타 원자력선진국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는 반면, 非核國들은 NPT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核國들의 의무행을 조건으로 단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장회의에서 남북간의 대립도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장회의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대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NPT의 불평등성을 비난하면서 5개 핵보유국에 대해 核軍縮, 핵불사용 보장, 핵실험 전면금지 등을 요구해 왔는바,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核武器 개발을 포기한 남한은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NPT 연장회의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상호협력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當局間 對話

1993년 11월 4일로 예정되었던 남북간 特使交換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거부와 일방적 대화 중단선언으로 취소된 이후 남북한간 긴장관계는 1994년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이영덕총리는 북한이 南北對話를 제의하더라도 핵문제 해결의

사가 없는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1.5)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이총리 발언이 북한에 대한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경하게 대응(1.10)하였다.

긴장관계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던 남북 當局間 對話는 북·미간 실무접촉(2.22~25)에서 양측이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한다”는 원칙을 포함한 ‘4개 동시행동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재개될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美國은 국무부 성명(3.3)을 통해 북·미 3단계 회담의 개최는 “남북한이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혀 남북대화 再開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남한은 ‘94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결정하고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을 3월 1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2.28)하였으며, 북한이 3월 3일로 修正提議함에 따라 남한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핵전쟁 연습 및 國際共助體制를 포기한 가운데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수정제의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실무대표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였다.

實務代表 接觸에서 남한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성있는 회담만이 남과 북을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음을 역설하여 북한의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해 ‘핵전쟁 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중지’,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 핵개발 비판 발언 취소’ 등 4개 요구사항을 실무대표 접촉 지속을

위한 前提條件으로 제기하였다.

이같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4차 실무대표 접촉은 성과없이 끝났으며, 이후 남북한은 5차 접촉(3.9)에서도 같은 對立樣相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특사교환 절차 토의에 실패하였다. 6차 접촉(3.12)에서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결정,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 유보, 북한 핵무기 불소유 추정 발표 등을 북측이 제시한 4개 요구조건의 타당성에 대한 남한의 수용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며 태도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특사교환 실현에 관한 남북한간 原則的 合意를 공동보도할 것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합의서 채택을 주장하고 북한의 주장을 거부하였는 바, 이는 북한이 실무대표 접촉의 실질적인 진전에는 관심이 없고 北·美會談 재개에 필요한 형식요건만을 갖추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6차 접촉이 합의내용 없이 종료된 후 나흘 뒤 개최된 7차 실무대표 접촉(3.16)에서 남한은 특사의 임무, 특사방문 차례 및 날짜, 체류기간 등에 대한 折衷案을 제시하여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하여 특사교환의 원칙적 합의 공동보도를 주장하는 한편, 특사의 임무에 전민족 대단결문제, 통일방도 확정문제, 민족자주성 원칙 준수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실무대표 접촉은 8차 회담(3.19)에서 북한이 종래 철회했던 4개 要求條件을 재거론하는 한편, 남한의 대결자세 포기 등을 주장하고 차기회담 개최결정을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중단되었다. 특히 박영

수 북한측 대표가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은 특사교환 成事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핵카드 효용성 극대화과 북·미회담에서 南韓 排除를 통한 위상강화를 위해 特使交換 성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특사교환을 위한 예비접촉은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삼는 북·미간 합의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사교환이 무산된 이후, 북한에 대한 추가 핵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에 접한 유엔安保理는 남북대화재개 촉구와 IAEA·북한간 핵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 검토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병행하여 남한정부는 ‘특사교환 철회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문호 개방’을 발표(4.15)하여 특사교환 노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남한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특사교환이 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南北頂上會談 및 기타 주요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긴장관계가 심화되어 오던 남북한 관계는 카터 전 미대통령의 訪北(6.15~18)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카터의 방북 목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美國의 입장전달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카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카터는 이를 남한정부에 전달하여 남북한간에 頂上會談의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金泳三大統領이 199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2. 25)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김일성은 카터를 통해 김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북한측의 의사에 접한 남한은 즉시 이영덕 국무총리 명의로 북한에 대해 부총리급을 首席代表로 하는 예비접촉을 6월 28일 개최하는 전화통지문을 발송(6.20)하였다. 북한의 동의로 개최된 첫 豫備接觸에서 남북한 양측은 순조로운 회담을 진행하여 회담날짜(7. 25)와 장소(평양) 및 2차회담 결정방법(정상간 별도 합의) 등에 합의하고, 기타의 문제는 수석대표 접촉에서 합의하도록 결정하였다.

남북한은 2차에 걸친 실무대표접촉(7.1~2)을 열고 통신과 경호 문제를 제외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후 통신실무자 접촉(7.7)과 경호실무자 접촉(7.8)이 각각 개최되어 절차문제를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며, 未合意事項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 13일 평양에서 다시 한번 실무자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측이 판문점에서 남한 대표단의 身邊安全保障 각서를 수교(7.9)하는 가운데, 김일성의 사망(7.8)이 발표되어 무산되었다. 북한은 김용순의 명의로 남북정상회담의 延期를 요청(7.11)하였고, 남한정부는 정상회담 재개문제는 북한의 재추진 통보를 받은 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경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文民政府의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으며, 북한 핵문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사회내 대북관계 개선요구가 촉진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경우, 핵문제에 따른 國際的 孤立, 경제상황의 어려움, 권력승계 구도의 마무리 필요성 등이 남한과의 대결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대화 재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은 김일성 사망으로 7월에서 8월로 연기되어 1차 회담(8.5~12)과 2차 회담(9.23~10.17)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핵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남북대화 재개 및 北·美間 연락사무소 설치를 명시하는 합의문이 채택되어 남북한간 핵문제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중국 李鵬 총리 방한시(10.30~11.4) 김영삼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재개 추진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하도록 核·經協 連繫政策 완화결정을 발표(11.8)하였다.

1995년 남북관계의 초점은 북·미 합의사항 이행과 南北經協 활성화 여부가 될 것이다. 북·미간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먼저 이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북·미간 기본합의문 채택이 김정일의 대외적 指導力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교

류·협력은 남한정부가 핵·경협 연계정책을 완화하였고, 북한은 非政府次元에서 남한기업들의 對北 진출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점차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내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김일성 사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김정일의 權力承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995년에 북한체제가 쉽게 안정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할 경우 對內的 權力基盤 강화를 위해 대외개방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1995년에도 남북한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남북대화의 개최 가능성을 對話窓口別로 전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핵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 및 국제기구 참여를 위하여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頂上會談은 북한측 대화 當事者가 될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확실하게 안정되어야 성사된다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1995년 상반기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1995년 하반기 중 김정일체제가 안정되고 남북한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자급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高位級會談과 부속기구를 통한 남북대화 개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3~94년 특사교환을 제외하는 가운데,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기존의 대화채널에 대한 正當性を 부인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또한 북·미간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에게 남북한 相互査察이라는 정치·군사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개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고위급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特使交換과 같이 특정한 방식의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필요한 과정이며, 북한이 합의에 의해 구속받게 될 제도화된 남북대화 채널보다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한 非定期會談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995년 남북대화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할 것이나, 특사교환 등을 통한 비정기적 접촉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3. 交流·協力分野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1994년 경제교류·협력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으로 1993년에 이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남북한간 特使交換을 위한 제8차 실무접촉(3.19)이 북한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결렬됨으로써 南北交易은 감소하였다. 남북교역의 감소경향은 6월에 들어와 북·미간 및 남북한간 새로운 접촉이 시작된 이후 반전되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침체상태에도 불구하고 委託加工交易(임가공교역)은 급격히 상승되었는 바, 이는 남북교역 확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3단계 회담에서 양국간에 基本合意文이 채택됨에 따라, 남한정부는 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발표(11.7)하였다.

〈표 4〉 南北韓 搬出入 總計

(건수/천달러)

구 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1989	4/1,037	66/ 18,655	—	1/ 69	4/ 1,037	67/ 18,724
1990	75/ 20,354	78/ 12,278	4/ 4,731	4/ 1,187	79/ 25,085	82/ 13,465
1991	328/ 165,996	300/ 105,722	40/ 26,176	23/ 5,547	368/ 192,172	323/ 111,269
1992	365/ 200,685	510/ 162,863	44/ 12,818	63/ 10,563	407/ 213,503	573/ 173,426
1993	478/ 188,528	601/ 178,166	76/ 10,262	97/ 8,425	554/ 198,790	698/ 186,591
1994	529/ 178,663 (422/ 177,048)	592/ 152,022 (504/ 160,152)	134/ 16,243 (60/ 8,761)	182/ 13,493 (57/ 5,262)	663/ 194,906 (484/ 185,809)	774/ 165,515 (561/ 165,414)

출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1호(1994.11.1~11.30)

* 1994년도 통계는 승인의 경우 11월 말, 통관의 경우 10월 말 현재 수치임.

()속은 전년 동기실적임.

남북교역 규모는 1994년 10월말 현재 通關基準으로 774건, 1억 6,552만 달러로서 前年 同期의 561건, 1억 6,541만 달러와 거의 동일하다.

남북교역에서의 반입과 반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통관기준으로 搬入은 약 5.1% 감소하였으며, 搬出은 약 156.4%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1994년 들어 확대되기 시작한 위탁가공교역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교역에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4>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91.8%로, 이는 북한의 경제력과 外換保有的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94년 위탁가공교역 실적은 <표 5>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11

〈표 5〉 年度別 委託加工交易 承認現況

(단위: 달러)

연 도	건 수	반 입	반 출
1991	1	22,880	13,406
1992	10	556,076	413,635
1993	44	4,384,634	3,610,788
1994	90 (33)	14,855,998 (3,512,727)	10,505,086 (2,822,889)
총계	145	19,819,588	14,542,915

출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1호(1994.11.1~11.30)

* 1994년도 통계는 11월 말 현재 수치임. ()속은 전년 동기 실적임.

월말 현재 90건, 2,536만 달러이다. 이는 1993년도에 비하여 300% 증가한 실적이다. 總 南北交易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0%로 작년의 3.4%에 비하여 급속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섬유류이며,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는 企業은 현재 총 15개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북교역 品目別 현황을 통관기준으로 분석하면, 1994년 10월 현재 반입의 경우 금괴·아연괴·빌레트 등 철강·금속이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섬유류가 10.7%, 농·임·수산물이 7.9%이다. 이러한 반입 물품구조는 1993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위탁가공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출의 경우 위탁가공교역의 영향으로 原·副資材로 이용되는 직물류의 반출이 총반출액의 42.5%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섬유류의 반출액이 73.6%에 달한다. 반면 화학제품의 비중은 전년 동기 20.8%에서 9.8%로 감소되었다.

경제분야에서의 人的 交流는 경제교류의 성격을 띤 교통·관광분야를 포함하여 1994년 11월말 현재 신청 423건, 1,079명에 성사 44건, 105명으로, 1993년 신청 285건, 821명에 성사 72건, 300명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한 후, 제17차 統一關係長官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11.8)하였다. ①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방문 허용, ②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조치 강구, ③시범적 경제협력사업 허용, ④제3국에서의 남한사업에 북한 노동자 고용 허용, ⑤제3국 합작 또는 現

地法人을 통한 투자 및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 참여 허용 등이 그 내용이다.

북한은 保安法 철폐를 남북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남한 정부의 경험조치 발표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은 정부 차원의 직접적 경제교류·협력은 현 단계에서 거부하고, 民間人次元에서 남한기업과의 경제교류·협력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직된 태도로 인하여 정부가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쌍용만이 북한을 방문(12.13~17)할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일단 남한기업의 진출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1995년에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남한정부의 經協活性化 措置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위탁가공교역은 계속 확대되어 남북교역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지속된 논란과 金日成 死後 남북간 신경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됨에 따라 1994년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1991년 89건에 956명, 1992년 37건에 609명, 1993년

26건에 221명이었으나 1994년 11월말 현재 30건에 384명에 달하고 있다.

人的 交流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술이 7건에 93명, 문화가 3건에 31명, 종교가 3건에 67명, 체육이 2건에 5명, 언론·출판이 2건에 2명, 기타가 13건에 186명이다.

1993년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를 통해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의 直接交流가 1건 성사되었으나, 1994년에는 직접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두 제3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오형근 동국대교수 등 9명은 北京에서 개최된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세미나」(2.20~23)에 참석하여 북한측 박승덕 민족연구회 회장 등 4명을 만났으며, 김봉태 전국대학 원리연구회 회장 등 40여 명이 모스크바에서 「국제대학생 평화세미나」(2.14~17)에 參席한 손종철 김일성대학 명예교수 등 4명과 만났다. 박종진 환경처 국장 등 3명이 중국에서 개최된 「UNESCO 동북아 생물권 보전지역 비교연구회의」에 참가(3.13~23)하여 북한측 리승식 UNESCO 민족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만났으며, 방진규 天道教 중앙총부 종무원장 등 2명이 류미영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을 북경에서 만나 東學革命 100주년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3.10)하였다.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이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와 만나 제2차 「코리아 통일미술전」 개최문제를 협의(4.28)하였고, 설창연 공업진흥청 국장의 2명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開催된 「한글로마자 표기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회의」에 참석(5. 20), 홍린택 북한 규격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國際規格 전단계의 규격안(PRE-STANDARD)인 기술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순태 대한예수교장로회 牧師 등 5개교단 63명은 남북한 및 해외 한인목사 등 120명이 참석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제4차 기독교 동경회의」(5.31~6.2)에 참석하여 강영섭 북한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등 5명을 접촉하였다. 한편, 양원채 고려대 독문과 3년생 등 전국대학 원리회 學生代表 26명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학생지도자 과학평화회의」에 참석(6. 21~26)하여 김철순 김일성종합대 철학과 4년생 등 북한 대학생 19명을 접촉하였다. 이강평 KOC 명예총무 등 3명은 대만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에 참석(6.27~28)하여 박명철 북한 NOC위원장 등 8명을 접촉하였다.

중국 연길에서 개최된 「'94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8.6~8)에는 북한에서 25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남북한간 한글 情報處理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밖에 장백산 일원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동북아 생물권 보전지역 연구관련 2차회의」(8.14~21)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21세기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에 협력방안의 전망 학술회의」(8.17~ 21)에서 남북한 學者들간의 접촉이 있었다.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기상청장회의」(9.9~17)에서 봉종현 기상청장과 리상낙 북한 국가환경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간에 남북한 기상분야 정보교류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중국 연길에서 개최된 「뉴코리아 사진전」(9.26~30)에서

는 이명복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등 5명과 김재천 북한 조선사진작가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한 최초의 寫眞交流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부분적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한 교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김일성 弔問波動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합의(10.21) 이후에도 남북경제협력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95년에도 사회·문화교류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김정 일체제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內部結束을 강화하기 위해서 北韓住民의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경수로건설 지원 등을 위해 남북한 과학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가 점증할 가능성도 있다.

4. 人道主義的 事案

1994년에는 이산가족문제, 러시아 伐木場에서 탈출한 북한 벌목공 문제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 발표 등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1) 離散家族問題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한 當局間 協議에 의해 가

능한 사안으로, 그동안 남한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 및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가족을 상봉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제3국을 통한 상봉이나 書信交換 등을 추진해 왔다.

이산가족들의 對北 住民接觸 신청과 성사 사례는 1993년 11월말 까지 712건 신청에 260건이 성사된 기록보다 감소되어, 1994년 11월 30일 현재 632건 신청에 132건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는 초기에는 주로 서신교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중국거주 동포들의 남북한 이산가족 동시초청 방식에 의한 가족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海外親知나 교류알선단체를 통한 교류는 해외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었으나, 최근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 이산가족상봉 주선단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산가족 연락센터가 9개소 설립되어 해외에 연고가 없는 이산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를 통한 在北 家族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알선에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어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 정부는 제3국을 통한 교류를 이산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교류알선단체를 지원·육성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이산가족들의 교류에 소요되는 經費支援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도에는 제3국을 통한 상봉 및 서신교환이 늘어날 전망이

다.

(2) 北韓 脫出 伐木工問題

북한은 구소련과 「林業協定」을 체결(1967.3)한 이후 시베리아 지역에 벌목공을 파견해 왔다. 벌목공의 수는 한때 2만여명에 달했으나, 1994년 8월 말 현재 1만명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재까지 170여명이 열악한 생활환경 및 고문·수감 등 非人間的 대우에 못이겨 독립국가연합과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現地定着, 일부는 한국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남한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원 장관의 담화(4.15)를 통해 탈출자가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거쳐 全員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한 「희망자 전원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한·러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시 인권차원에서 탈출벌목공들이 언제든지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6.2)하였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탈출벌목공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한국에 송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한 정부가 希望者 全員收容 방침을 천명한 이래 5월에서 11월에 걸쳐 탈출벌목공 16명이 러시아 등 제3국과의 외교교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되, 국내정착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종합대책 방안을 총리실이 주관하는 실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體制適應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능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북한 벌목공의 南韓歸順을 납치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벌목공의 탈출현상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北韓의 人權問題

國際赦免委員會 아·태대표단은 서울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7.30) 하였다. 사면위는 평양 동남쪽 70km 정도 떨어진 승호마을에 6백여명의 良心囚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공개하면서, 이들은 겨울에 난방시설은 물론 조명 시설 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구타 등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赦免委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승호마을에는 1990년까지 6백여명의 보통 정치범들과 함께 북한의 전직 고위관리나 在日同胞 등 49명의 특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면위는 정치범 55명의 명단을 公開했는데 이 중에는 재일교포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남북자로 추정되는 남한 출신도 11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1979년 유럽연수 중 노르웨이에서 납북된 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던 前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가 이곳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일각에서는 고상문씨 등 납북자들에 대해 북한이

조속히 歸還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남한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유엔人權委員會와 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993~94년초에 걸쳐 남한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및 표류되어 남한 영해로 넘어왔던 북한군 병사 2명을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에 인도한 사실을 들어 북한도 이와같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拉北者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한 정부는 현재 국제사면위원회나 國際赤十字社 등 공인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당국에 모든 형태의 고문과 수감자 학대 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하며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방문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에 대한 人權侵害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협력과의 연계정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벌목공 문제로 인해 북한 내부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나, 1995년에는 북한 人權問題가 남한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 미국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5.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關係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1991.9.17) 이후 국제무대에서 상호접촉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 核問題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1994년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 접촉과 협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994년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 접촉과 협력은 다음 몇건에 불과하다. 뉴욕에서 개최된 UNDP 주관 豆滿江지역개발 실무회의(1.31~2.2)에 문하영 외무부과장 등 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월말까지 개발전략과 투자지침 자료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6개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3월에는 박종진 환경처국장 등 3명이 UNESCO 동북아 생물권 보전지역 비교연구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리승식 UNESCO 민족위원회 사무차장 등과 접촉한 바 있다. 6월에는 이강평 KOC 명예총무 등 3명이 대만에서 개최된 東아시아 10개국간의 「제8차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6.27~28)에 참석하여 박명철 북한 NOC위원장 등 8명을 접촉하여, 추가 개최종목 및 협의회 현장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7월에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길림대 조선연구소 주최 「동북아 세아지역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7.18~24)에서 이행호 世界經濟·南南協力研究所 소장 등 북한 참석자 4명은 나진·선봉지역 개발관련 법적제도와 투자환경을 남한측 참석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9월에 아·태지역 기상청장회의에서 봉종현 기상청장과 리상낙 북한 국가환경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한 氣象分野 정보교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國際舞臺에서의 남북한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협력보다는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남북간 갈등이 두드러졌다. 1993년에는 북한이 국제민

간기구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요구하거나, 北韓 赤十字사가 1992년 경남 거제에서 발견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며 對南 공세를 강화하였다. 반면, 1994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人權問題를 제기하며 對北 공세를 취하였던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문제와 고상문씨 남한 송환 요구는 남북관계를 긴장시킨 새로운 요인이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남한이 對北 경제협력 재개의사를 발표함으로써 남북한간 대결과 긴장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특히 북한 경수로건설 지원 등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 협력과 공동보조가 부분적이거나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의 經協 收容拒否 등 경직된 對南政策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때 국제무대에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附 錄

빈 면

부록

1994년도 主要事件日誌

- 1. 1 김일성, 新年辭 발표
 - 북·미회담 통한 핵문제 해결
 - 농업·경공업의 비중 강조
 - 무역증대 강조
- 1. 6 미국, 중국 상품의 對美 수출쿼터 감축
- 1. 7 폴란드,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과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계획 참여입장 천명
북한·IAEA, 핵사찰 관련 실무접촉
- 1. 9 우크라이나, 미국의 120억달러 원조 대가로 核武器 폐기 결정
- 1.10 북한, 對南 담당비서에 姜柱日 노동당 통일전선 제1부부장 기용
북한·IAEA, 제2차 실무접촉
- 1.11 북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채택
- 1.13 미·러, 모스크바 頂上會談(~14)
 - NPT 체제 무기한 연장제의
 - 북한에 대해 NPT 의무 준수 촉구하는 성명채택
 우크라이나, 미·러와 보유 핵무기의 완전철폐협정 조인
- 1.17 黃長擘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방중시 江澤民 중국 공산당총서기와 우호관계 지속 재확인
북한·IAEA, 제3차 실무접촉
- 1.19 북한·IAEA, 제4차 실무접촉

- 1.20 李榮德 부총리, 북한 핵문제 解決되면 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남한 기업참여 추진 표명
- 1.24 북한·IAEA, 제5차 실무접촉
유미영 북한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위원장, 남한 천도교측에 東學革命 100주년 共同紀念行事 위한 접촉 제의
- 1.25 북한·IAEA, 제6차 실무접촉
- 1.26 천도교 중앙총부, 북한의 동학 100주년 共同紀念行事 제의 수락
- 1.27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중시 韓半島非核化 및 아·태지역 핵확산 통제를 위한 지역포럼 창설 제안
2. 1 미 상원, 對北 결의안 채택
- 북한의 핵사찰 불수용시 경제제재,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텀스피리트(T/S) 훈련 실시 등 촉구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人權狀況 비난
2. 2 손성필 駐러시아 북한대사, 미국이 뉴욕 실무접촉 합의사항 불이행시 북한의 NPT 탈퇴가능 시사
2. 3 북한, 金平一을 駐핀란드 대사에 임명
- 2.11 미·일 정상회담,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시 공동대응 합의
- 2.15 북한·IAEA,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합의
일본, 「방위계획의 대강」 공식 제정
- 육상자위대 減縮(18만→15만)
- 2.16 북·미 실무접촉, 남북한 특사교환 및 3단계 고위급회담 관련 협의 정부, 特使交換시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및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을 제의기로 결정
- 2.17 통일관계전략회담, IAEA사찰단의 入北과 동시에 조건부 T/S 訓

練 中止 결정

- 2.21 일·러, 모스크바에서 제3차 평화조약 교섭회의 개최
- 2.23 朱鎔基 중국 부총리, 일본과 경제교류 확대방안 논의
북·미 실무접촉, 핵사찰 수락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 2.24 옐친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를 배제한 NATO 확대에 반대입장 표명
강택민 중국 공산당총서기, 김일성 招請
- 2.25 북·미 실무접촉, 4개항에 최종합의
- T/S 훈련 중단
- IAEA 사찰개시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
김영삼 大統領, 북한 핵문제 해결 위한 南北頂上會談 의사 표명
- 2.28 송영대 통일원차관, 제4차 特使交換 實務接觸 제의
3. 1 IAEA 사찰단, 북한의 7개 신고 핵시설 사찰 착수
일·러, 도쿄에서 제3차 국방관계자 세미나 개최
3. 2 등소평, 북한의 경제개혁 지원 및 김일성의 訪中 실현 지시
3. 3 남북한, 제4차 특사교환 실무접촉
국방부, T/S훈련의 조건부 中斷 발표
- 3, 9 남북한, 제5차 特使交換 실무접촉
- 3.10 李會昌 총리, 특사교환 실무접촉 결렬시 T/S訓練 재개 표명
- 3.12 李鵬 중국 총리, 인권문제로 인한 최혜국 대우 철회시 미국의 중
국시장 진출 통제 천명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 방한시 핵사찰 및 특사교환 성사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임을 再確認

남북한, 제6차 특사교환 실무접촉

3.16 남북한, 제7차 특사교환 실무접촉

3.19 남북한, 제8차 특사교환 실무접촉 결렬에 따라 特使交換 무산

3.20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러·중·북 4자회담 제의

한·중, 양국간 군사교류 확대 및 군사교육 분야의 교류 강화 합의

3.21 북한 외교부, IAEA가 불공정성을 확대할 경우 NPT 탈퇴 방침 발표

정부, T/S訓練 재개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早期配置 방침 결정

3.22 이붕 중국총리,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반대 입장 표명

3.24 러시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者會談 제안

— 남북한·미·일·중·러·UN·IAEA 참여

김영삼 大統領, 訪日중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협조체제 유지 강조(~26)

3.28 한·중, 문화협정 체결

3.29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 被侵時 조-소 방위조약 의거 지원 용의 표명

일본, 「대외경제 개혁요강」 발표

4. 1 유엔안보리, 對北 안보리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4. 4 「한·러 극동협회», 「러시아 극동시베리아·한국 협력위원회」와 서울에서 제3차 공동회의 개최

4. 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담 開幕(~8)

— 식량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4. 8 정부, 先특사교환 後북·미회담 方針 재확인
- 4.11 북한, 8.15를 계기로 「전민족 대단결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민족대회」 소집 제의
클레슈니코프 러시아 군참모총장, 訪中(~14)
- 4.13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50차 연차회의 개최
- 4.15 GATT, 閣僚會議開幕
- 125개국 대표들이 UR 최종의정서와 WTO 설립협정 서명
정부, 시베리아탈출 北韓별목공 중 희망자 全員 歸順 허용 결정
정부, 特使交換을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
- 4.19 김일성,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제공받을 경우 放射化學實驗室 불사용 의사 표명
- 4.20 북한, 방사화학실험실을 제외한 6개 핵시설에 대한 후속사찰 허용의사 표명
- 4.26 북한, 「정부 정당 사회단체연합회의」 명의로 8.15 민족대회 개최 제의
한·일, 도쿄에서 國防長官 회담 개최
- 4.27 북한 외교부, IAEA의 영변 5MW원자로 연료봉 교체입회시 시료채취 불가 표명
- 4.28 북·미, 핵문제 해결 위한 뉴욕 실무접촉
북한 외교부, 미국에 대해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기 위한 회담 제의
- 4.29 이병태 국방장관,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94~95년 한·러 군사교류 諒解覺書」 서명

- 5. 2 駐韓 UN 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의 철수 의사 접수 발표
- 5. 6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연료봉 交替作業 실시 표명
- 5. 7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이 연료봉을 분리·보관하지 않으면 UN安保理의 對北制裁 지지 결정
- 5.11 김종수 駐UN 북한 차석대사,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IAEA 추가사찰 수락입장 표명
- 5.12 북한 林業部, 남한의 북한 벌목공 귀순추진 관련 비난
- 5.13 북·러 외무차관회담,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 도출 실패
駐UN 북한대표부, 핵연료봉 교체작업 돌입 표명
- 5.18 IAEA 사찰단, 북한 영변 핵발전소에 대한 사찰 착수
- 5.19 일·러 國防次官會議, 군인사교류·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협의
- 5.21 북한, 북한 벌목공들의 남한귀순을 납치행위로 간주한다고 주장
- 5.23 중·러, 국경지역 군축과 相互信賴 강화를 위한 군사전문가 회의 개최 (~6.10)
- 5.24 북한, 군사정전위를 대신하는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개설 통보
- 5.26 클린턴 美대통령, 對中國 최혜국대우 연장과 인권문제 연계정책 철회
북·미 실무접촉, 3단계 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 5.27 북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규칙 발표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總理, 북경에서 이붕 중국 총리와 경제·무역관계 확대 합의

- 5.28 북한 외교부, IAEA와 연료봉 교체 협상 결렬 발표
- 5.29 차경주 조선샘물주식회사 총사장,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6천만 달러 상당의 物物交換 합의
- 5.30 UN안보리, 對北韓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6. 1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경협확대 합의 (~4)
6. 3 唐家璇 중국 外交部副部長, 방한시 對北韓 제재 반대 입장 표명
한·러, 모스크바에서 제4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6. 6 북한 祖平統, 對北韓 制裁는 곧 전쟁이라고 경고
6. 7 이스라엘, 요르단과 평화회담 개최
6. 9 중국, 남북한·미국·IAEA 4자간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제의
- 6.10 강택민 중국 공산당총서기, UN의 對北韓 제재 반대의사 표명
IAEA 이사회, 對北韓 제재결의안 채택
중국, 40번째 지하 핵실험 실시
- 6.13 북한 외교부, IAEA탈퇴 성명 발표
- 對北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
- 6.15 카터 前 美大統領, 방북하여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회담
- 6.16 카터, 김일성과 회담
- 6.17 카터, 김일성과 2차회담
-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시 UN 제재 중단 및 북·미 3단계 회담
개최 용의 通報
- 6.18 김영삼 대통령, 김일성이 제의한 남북정상회담 수락
미·러, 합동군사훈련 (~23)

- 이영덕 총리,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副總理級 豫備接觸 제의
- 6.22 러시아, NATO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협정 체결
- 강성산 북한총리,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豫備接觸 제의 수락
- 6.23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7.8) 합의
- 6.26 북한 올림픽조직위원회,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不參 발표
- 6.28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남북정상회담을 7.25~27까지 平壤에서 개최기로 합의
7. 1 北예멘, 南예멘 수도 아덴 점령
7. 2 남북 실무대표접촉,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實務節次合意書 교환
- TV생중계
- 남측의 1차선발대 7.13 방북
7. 8 김일성, 死亡
- 7.11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남북정상회담 延期 통보
- 7.12 중·러, 전략핵무기 배치 금지협정 체결
- 7.14 祖平統, 남한의 弔問客을 동포애로 맞이한다고 발표
- 정부, 김일성 조의목적의 訪北 일절 不許 결정
- 7.15 북한, 정부의 김일성 弔問團 파견 不許方針 비난
- 7.18 김영삼 대통령, 北韓의 人權問題에 대한 UN의 관심 촉구
- 7.20 북한,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정일 권력승계 확인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인정 방침 발표
- 7.21 북·미 실무접촉,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 합의
- 7.23 무라야마 日총리, 訪韓(~24)
- 북한 핵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

－ 양국간 정치·경제 협력관계 강화

- 7.25 ASEAN 지역포럼(ARF), 안보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최 합의
라빈 이스라엘 총리, 후세인 요르단 국왕과 적대관계 청산 공동 선언 발표
- 7.27 북한, 전승기념 4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8. 1 김영삼 대통령, 高相文씨 등 拉北 인사들의 즉각 송환 촉구
8. 4 정부, 남북자송환문제를 남북대화시 離散家族問題와 동일차원에 서 제기하기로 결정
8. 4 북·러,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최초의 합작무역회사 설립
8. 5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합의점 導出 실패
- 8.10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공동발표
- 8.15 김영삼 대통령, 북한 核투명성이 보장되면 경수로 건설 支援용의 표명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천명
- 8.20 러시아, 脫北 벌목공의 신원 확인시 한국 귀순 허용방침 발표
- 8.24 한·일, 도쿄에서 제2차 한·일포럼 개최 (~26)
－ 아·태지역 및 양국간 안보·경제·문화협력 방안 논의
- 8.25 고노 일본 外相,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 표명
9. 1 중국,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의 철수 결정을 북한측에 전달
9. 2 강택민 중국 공산당총서기, 러시아 방문시 국경지역 병력 감축 합의
9. 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의 과거 核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北·美 連絡事務所 개설 지지 입장 표명

- 9. 8 미국 국무부, 對대만 관계 강화 조치 발표
- 9. 9 북한 외교부, 북·미 협상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 9.10 북한, 김정일에 대해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 공식 使用
북·미, 평양과 베를린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및 핵문제 해결 위한 전문가회담 착수
- 9.13 키드 IAEA대변인, 북한 핵연료 제조공장 및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사찰 가능 표명
북·미 평양 전문가회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9.14 일·러, 동해상에서 최초의 合同 海上搜索 構造訓練 실시
김정우 북·미 베를린 전문가회담 북측대표, 한국형 경수로 도입 반대입장 표명
- 9.18 북한,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면서 南北協商 거부 표명
- 9.23 북·미 3단계 2차고위급회담, 경수로 지원 및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협의
- 9.25 북한 외교부, IAEA의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 거부 성명 발표 표명
- 9.28 미·러 워싱턴 頂上會談, 전략핵탄두의 해체 시기 및 NPT 연장 등에 합의
- 9.28 정부, 對北 지원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하며 경수로 지원전에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立場 재확인
- 10. 3 강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 북한측에 콜레라 共同防疫措施 및 의약품 제공 제의

10. 4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錢其琛 中 국외교부장과 사정거리 300km
이상 중국 미사일의 대외판매 금지 협정 조인
10. 6 北·美, 3단계 2차 고위급회담 開催
한·미 제26차 연례안보협의회,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합
동참모본부에 이양(12.1)키로 합의
10. 7 중국, 41번째 지하 核實驗
한·미 제26차 연례안보협의회, 1995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
비 분담금을 3억 달러로 인상 합의
- 10.10 김영삼 대통령, 南北頂上會談 재추진 의사 표명.
- 10.11 북한, 단군릉 준공식
- 10.16 북한, 김일성 사망 1백일 중앙추도대회 개최
- 김정일 3개월만에 공식 등장
- 10.18 북·미 3단계 2차 고위급회담, 북한 핵문제 관련 基本合意文에 잠
정 합의
- 10.20 페리 미국방장관, 클린턴 大統領의 특사자격으로 방한
정부, 對北 경수로 지원대책 기구 설치 결정
- 10.21 北·美, 제네바 基本合意文 체결
-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전 북한의 IAEA 안전조치 전면이행
및 NPT 완전복귀
- 2천MW급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 대체 에너지로서 중유 제공
- 對北 무역 및 투자제한 일부 해제 및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 재개 등
- 10.26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 폐암치료 위해 파리 到着

정부, 對北 경수로 지원의 분담액 협상안 결정

- 한국 55%, 일본 30%, 미국 10% 등
- 대체에너지 비용은 부담 할 수 없다는 방침 고수

10.27 미·러 정상회담, 경제발전을 위한 동반자 협정 조인(~28)

10.28 일본, 자위대 개정안 통과

10.31 李鵬 중국총리, 방한(~11.4)

- 북·미 합의문 이행 및 南北對話 再開위한 협력 합의

11. 1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갈루치 美國務次官補에게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조치 착수」 메시지 전달

11. 2 祖平統, 「94독수리 합동군사훈련」 비난

11. 3 北·美 뉴욕 실무접촉, 북·미 기본합의문 履行方案 협의

정부, 對北 경수로 지원을 위해 가칭 「南北 에너지 共同體」구성 결정

정부, 남북한이 平和協定 체결한 후 美·中이 보장하는 「2+2」 방안 검토

북한, 그루지야 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1. 6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 일본에 대해 북방영토의 반환 가능성 일축

11. 7 알렉산더 슈메이코 러시아 상원의장, 의회대표단 이끌고 방한(~12)

김영삼 대통령, 南北經協 活性化 의사 표명

- 핵·경협 연결방침을 완화하는 공식 입장 표명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북경에서 이성록 민족경제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민족산업개발협회 회장과 접촉

11. 8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방한시 對韓 방위공약 不變 강조(∼9)
 미국, 中間選舉 실시
 통일관계장관회의, 「南北經協緩和措置」 확정 발표
 韓·日, 北·美 合意에 관한 첫 防衛問題 실무회담 개최
11. 9 미국, 共和黨 中間選舉 압승
 한국기자협회, 南北記者 交流案 제의
 北韓, 남한의 대북 경협방안에 대한 거부입장 표명
 미·일·러, 모스크바에서 안보심포지엄 개최
- 11.10 조평통, 정부의 남북경협 방안 거부 성명 발표
- 11.11 김광섭 빈 駐在 북한대사, IAEA 특별이사회 의장과의 접촉에서
 IAEA의 핵사찰 활동 협조의향 표명
 한·일 외무회담, 對北 경수로 지원에 협조 합의
- 11.13 정부, KEDO내에 한·미·일·중·러 5개국이 참여하는 운영위 구성 방안 마련
 돌 美상원 원내총무, 북·미 합의내용의 문제점 추궁 시사
- 11.14 조평통, 러시아 북한 벌목공 및 북한 주민의 한국귀순 관련 對南 경고
 헬름즈 美상원의원, 북·미 합의문 재평가 의사 표명
 한·미·일 정상, 남북대화 재개가 북·미회담 합의이행에 필수적이라는데 합의
- 11.18 한·미·일 경수로 지원관련 회의,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KEDO 구성 합의
 북·미, 북한 폐연료봉 처리 관련 전문가협상 완료
 - 12월 실무적 기술문제에 대해 재협상 합의

- 北韓, IAEA 대표단에 입국비자 발급
 김웅렬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나진·선봉 무역지대내
 1995년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허용 표명
- 11.22 북한, 平和協定으로의 전환위한 다자회담 반대입장 표명
- 11.24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금융기관과 경제단체의 北韓 常駐
 事務所 설치 허용
- 11.27 소스코베츠 러시아 제1부총리, 訪日時 고노 일본외상과 일본의
 대리 경제지원 및 러시아의 WTO 가입문제 등 합의
- 11.28 IAEA, 북한의 核개발 계획 凍結 확인
- 11.30 韓國軍, 平時作戰權을 韓美聯合司令部로부터 환수
 북한, 북·미전문가회담(북경)에서 한국형 경수로 拒否意思 재표
 명
12. 1 미국 의회, 북한에 제공될 중유 50만톤의 대체에너지 추가분 지
 출 승인
12. 4 우크라이나, 미·영·러의 安全保障 대가로 NPT 가입 서명
12. 5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담 개막(워싱턴)
12. 8 클린턴 미대통령, UR 무역협정 이행법안 서명
 미국, 1996년말까지 육군병력 4만 5천명 감축 발표
12. 9 러시아, 14억 7천만 달러의 對韓 부채 군사무기로 상환 예정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회담, 영사문제 및 기술적 문제 해결
 - 95.4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
 - 연락대표부를 추후 대사급으로 승격
 - 5~6명의 常駐 人員들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 부여
- 12.10 정부, 6개 기업 41명에 대한 방북 승인

정부, 미국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시기
의 연계 촉구

- 12.11 머코스키 美상원의원, 사이먼 상원의원과 평양 방문
- 12.12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북·미 외교관계 수립 以前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등 요구
- 12.13 주식회사 쌍용, 대표 12명 평양 방문
 - 나진·선봉지역의 투자환경조사 및 시멘트 합작공장 설립 협의
 -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남한의 김일성 조문방해 사과 및 국가보
안법 철폐조건하의 남북대화 재개 可能性 표명
- 12.15 군사정전위 중국 대표단, 본국 철수
- 12.16 韓·美·日, KEDO 발족(1995.2) 합의
 - 본부는 뉴욕
- 12.17 駐韓 美軍, 헬기 1대의 북한지역 불시착 발표
 - 나이 美국방차관보, 95년말까지 감축예정인 주한미군 7천명의 계
속 주둔 확정 발표
- 12.19 리처드슨 美하원의원, 방북중 헬기 조종사의 조속한 송환 촉구
 - 메커리 美국무부대변인, 헬기 조종사 즉각 석방 촉구
 - 북·미합의사항 이행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표명
- 12.21 북·미, 軍將星級 접촉에서 사망 조종사의 유해송환 합의
- 12.22 북한, 민간항공기들에 대한 領空開放 방침 발표
- 12.23 북한,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기념보고대회 개최
- 12.26 미·러, 核情報 공유 합의
- 12.28 허바드 美국무부 副次官補, 미군 헬기 조종사 송환협상차 訪北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건설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の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변화와 政策전망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의 해제
- 94-21 1995年 NPT 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區와의 비교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 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北韓의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核實驗이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契機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對北韓政策: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關係：1994～1995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A TIME
OF CHANGE(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 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1994～1995

年別情勢報告書 94-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232-4725, FAX：232-5341

印刷處 한국컴퓨터산업(주) 전화：273-8111

印刷日 1994년 12월 25일

發行日 1994년 12월 31일
